

2024.10.

울산 북구 민간위탁 사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울산북구의회
ULSAN BUKGU COUNCIL

남산 나라살림연구소
Fiscal ReForm Institute

제 출 문

울산복구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울산 복구 민간위탁 사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0. 31.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

책임연구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구원	주진우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Ⅰ 목 차 Ⅰ

I. 연구개요

1. 연구개요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배경	13
3. 연구목적	14
4. 연구내용	14
5. 연구방법	15

II. 민간위탁의 개념 및 정의

1. 민간위탁 활성화 배경 및 필요성	16
2. 민간위탁의 개념과 정의	18
3. 민간위탁 유사 제도	21
4. 민간위탁의 제도적 근거	28
5. 민간위탁 주요 내용	31

III. 민간위탁 현황 분석

1. 민간위탁 예산 현황	41
1) 분석방법	41
2) 예산현황	43
3) 전국 민간위탁 예산 현황	45
2. 민간위탁 사업 현황	63
1) 분석방법	63
2) 사업 현황	64
3) 세부 분석	69
3. 위탁사무 점검	84
1) 점검 의무 및 권한	84
2) 점검 사항	85

IV. 민간위탁기관 및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 민간위탁 기관 설문조사 결과	90
1) 조사 개요	90
2) 조사 결과	92
3) 민간위탁 수탁기관 설문조사 요약	100
2.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2
1) 조사 개요	102
2) 조사 결과	103
3) 조사 결과 요약	106

V. 민간위탁 개선 방안

1. 성과평가 강화	108
1) 성과평가의 중요성	108
2) 울산시 복구 현황	109
3) 개선방안	110
2. 장기위탁 관행 개선	125
1) 장기위탁문제 개선의 필요성	125
2) 울산시 복구 현황	126
3) 개선방안	127
3.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137
1)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	137
2) 울산시 현황	137
3) 개선방안	138
4. 민간위탁시설·사무 종사자 보호	141
1) 민간위탁시설·사무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	141
2) 울산시 현황	142
3) 개선방안	144

VI. 정책 제언

1. 민간위탁금 중 사회복지성 지원금 항목 재편성 검토	148
2. 민간위탁관리지침 작성	149

3. 조례 개정 필요 사항 정리	154
1) 구 의회 역할 강화	154
2) 민간위탁관리지침 의무 작성	155
3) 장기위탁 관행 해소	155
4)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157
5) 주민 참여 활성화	158
6) 회계 감사	158
7) 민간위탁시설·사무 노동자의 권익 보호	159
<참고문헌>	160

표 목차

[표 1] 민간위탁 정의	19
[표 2] 민간위탁과 주요 유사 제도	27
[표 3] 행자부 민간위탁 사무 기준 및 사업 유형	33
[표 4]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기준 및 사업 유형	34
[표 5] 민간위탁 분야별 사업 유형	35
[표 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정의 ...	42
[표 7] 2024년 울산시 복구 민간이전 경비 현황	43
[표 8] 최근 5년간 울산시 복구 민간위탁금 현황	43
[표 9] 울산광역시 각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현황 비교	44
[표 10] 2020~2024년 전국 지자체 예산, 사회보장성수혜금, 민간위탁금 변화	46
[표 11] 2020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48
[표 12] 2021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49
[표 13] 2022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51
[표 14] 2023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52
[표 15] 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54
[표 16] 2020~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민간위탁금 변화 ·	55
[표 17] 민간위탁금 증가율 상위/하위 지자체 현황	57
[표 18] 울산 복구 민간위탁사업 중 사회복지성 지원금 현황	59
[표 19] 기초지자체별 민간위탁금 비율 비교	62
[표 20] 울산시 복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65
[표 21]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현황	68
[표 22] 분야별 민간위탁 현황	69
[표 23] 유형별 민간위탁 현황	70
[표 24] 부서별 민간위탁사업 현황	71
[표 25] 계약기간별 민간위탁 현황	72
[표 26] 위탁사업 지속기간별 민간위탁 현황	72
[표 27] 20년 이상 지속 민간위탁사업 현황	73
[표 28] 현 수탁자와 재계약 횟수별 민간위탁 현황	73

[표 29]	현 수탁자와 2회 이상 재계약 위탁사업 현황	74
[표 30]	성과평가 시행 여부별 민간위탁 현황	75
[표 31]	성과평가 미시행 위탁사업 현황	76
[표 32]	수탁기관 선정 시 계약방식별 민간위탁 현황	78
[표 33]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위탁사업 현황	78
[표 34]	사무편람 유무별 민간위탁 현황	79
[표 35]	사무편람 없는 민간위탁 현황	79
[표 36]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여부별 민간위탁 현황	81
[표 37]	의회 미동의 위탁사업 현황	82
[표 38]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내 지휘감독 조항	84
[표 39]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상 의회 권한 조항	85
[표 40]	민간위탁 사업 분야	92
[표 41]	민간위탁 수행 목적	92
[표 42]	민간위탁 채원(복수응답)	93
[표 43]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 비중	94
[표 44]	법인전입금 비중	94
[표 45]	법인전입금 부담 정도	94
[표 46]	민간위탁제도 문제점(복수응답)	95
[표 47]	민간위탁 결정 방식 적절성	96
[표 48]	수탁자 선정 방식 적절성	96
[표 49]	현 민간위탁 계약기간 관련 의견	97
[표 50]	성과평가제도 적절성	97
[표 51]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98
[표 52]	민간위탁제도 개선 방향	98
[표 53]	민간위탁 대상 확대/축소 의견	99
[표 54]	민간위탁기관 이용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03
[표 55]	이용 교통수단	104
[표 56]	시설 이용 빈도	104
[표 57]	분야별 만족율	105
[표 58]	분야별/속성별 ‘매우만족’ 비율	105
[표 59]	민간위탁 시설 개선필요 사항	106

[표 60]	울산시 북구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10
[표 61]	서울시 강서구 종합성과평가 지표	112
[표 62]	서울시 종합성과평가 중 감점 지표	113
[표 63]	완주군 종합성과평가 지표 중 감점 지표	114
[표 64]	경기도 구리시 성과지표	114
[표 65]	서울시 유형별 종합성과평가 지표 (2023)	116
[표 66]	2024년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공고 현황 ..	118
[표 67]	000 전통시장 성과평가 결과서	119
[표 68]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분석 기준	127
[표 69]	서울시 민간위탁 적정 여부 원점 재검토 판단 기준	132
[표 70]	표준협약서 내 종사자 권익보호 조항 예시	145
[표 71]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 협약체결 조항 내 신설(안) ·	145
[표 72]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예시	147
[표 73]	광역 지자체 사례: 서울특별시	150
[표 74]	기초 지자체 사례: 서울시 서대문구	153

Ⅰ 그림 목차 Ⅰ

[그림 1] 민간위탁 주요 절차	39
[그림 2] 민간위탁사업 현황 분석 양식	64

I . 연구 개요

1. 연구개요

1) 연구범위

- ☐ 지역적 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 ☐ 내용적 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사업
 - 민간위탁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현황 및 분석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개선 방안

2. 연구배경

- ☐ 행정서비스의 주민 요구 증대로 공공의 민간위탁사업 확대
 -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증대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요구도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임.
 -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맞추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이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예산 낭비, 서비스 부실, 대리인 문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함.

□ 민간위탁사업의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민간위탁사업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에 대한 견제·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울산시 북구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울산 북구의 민간위탁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지침의 제·개정, 민간위탁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연구내용

□ 민간위탁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제도, 조례 분석
- 민간위탁 및 유사 용어 구분
- 민간위탁사업 특성 파악

□ 민간위탁사업 운용 현황 분석

- 민간위탁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 민간위탁사업 계약 과정 점검
- 민간위탁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제도 점검
- 유형별 분석

☐ 민간위탁사업 주요 이해관계자 조사

○ 수탁기관 조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타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우수 사례 조사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사업 개선 방안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절차 운용 개선 방안

○ 관리 체계 강화 방안

○ 조례 제·개정 방안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 방안

5.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 수탁기관 및 이용자 설문 조사

○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비교분석

II. 민간위탁의 개념 및 정의

1. 민간위탁 활성화 배경 및 필요성

□ 민간위탁 활성화 배경

-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이 대신하여 제공,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비용경제(Transaction Cost Economics),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등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1980년대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해 본격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확산함(행정자치부 2003; 김원재 2010; 주재복·정창수·박현숙 2020).
- 공공부문의 경직성 완화 및 비용 절감,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주민의 고도화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며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됨.
- 한국에서는 IMF 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며 작은 정부 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시스템, 대 국민 서비스 개선 등 행정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박성애·이령 2022, 111).
- 특히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에 대한 양적·질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의 효율성이 강조되며 민간위탁방식이 크게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이 증가하는 추세임(박기묵 외 2020, 102).
-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1948년 쓰레기 수거 사업에서 시작되어 보건 및 환경, 사회복지, 교통, 건설, 공원 등의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확대되었으며(송근원·김태성 2002),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사무역시 계속하여 늘어나는 추세임.

- 다른 한편, 민간위탁의 개념을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민간부문을 통해 수행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법이나 관습을 포함한 제반 제도적 여건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할 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1980년대 훨씬 이전부터 민간위탁이 광범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김영중 2017, 407-412).

□ 민간위탁의 제도적 유용성

-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

- 현대사회 들어 행정수요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주민들의 고도화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방식의 필요성 대두.

-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직접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능률적이며 비효과적이라는 평가 때문(박기묵 외 2020, 105).
- 이에 민간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시설 장비,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공공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김정해 외 2015, 18).

- 행정 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화 추구

- 점차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하고 행정이 비대화되며 행정의 관료화와 고비용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조직과 인력을 절감, 행정의 비대화 억제와 고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 민간의 행정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 추구

- 민간위탁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영역의 주체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는 민간이 행정과 동등한 관계에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내포함.

- 즉 행정이 독점적으로 시행해왔던 공공성의 달성이 더는 행정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행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행정과 민의 협치’ 내지는 민간의 활용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을 의미(최철호 2013, 22).
-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제의 목적 및 최근 협치형 민간위탁제와 같은 민주적 민간위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도 민간위탁제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이를 통해 행정의 분권화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2. 민간위탁의 개념과 정의

□ 민간위탁의 개념

-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법률적 정의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위탁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음. 광의적 개념의 민간위탁은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강인성 2018, 1).

□ 민간위탁에 관한 다양한 정의

[표 2] 민간위탁 정의

구분	내용
박중훈 (2000)	▲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생산 및 공급하지 않고 민간부문에게 구매하여 충당하는 것
Kelman (2002)	▲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간 계약을 통해 정부가 수행하던 서비스나 제품 조달을 민간부문이 대신하여 제공하는 것
행정자치부 (2003)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황혜신 (2006)	▲ 민영화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자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제공 방식의 하나
강인성 (2008)	▲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하는 사무를 계약을 통해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정부 기능에 있어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
정철현·김정한 (2008)	▲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경쟁을 통해 민간의 계약대상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공급형태
OECD (2010)	▲ 정부가 법에서 허용하는 공식적 계약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문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최철호 (2013)	▲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책임하에 해당 행정사무를 처리케 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이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협조하게 하는 제도
류춘호 (2014)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지 않고 민간이 계약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방식
강병준·윤건·윤민석 (2015)	▲ 행정기관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법률에 근거한 계약을 통해 민간이 대신 공급하도록 하는 것
박기목 외 (2020)	▲ 민간위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독권 등의 행정 책임을 유보한 채 민간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
김정해 외 (2020)	▲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제공방식 중 하나이지만, 다른 서비스 제공방식과 민간위탁 간 차이점은 정부 서비스를 민간이 수행하지만 최종 관리·감독 권한은 정부가 가진다는 점을 강조

서울시 (2022)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박성애·이령 (2022)	▲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김덕준·임정빈 (2023)	▲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

출처: 김정해 외(2015)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2003), 최철호(2013), 강병준·윤건·윤민석(2015), 박기묵 외(2020), 김정해 외(2020), 서울시(2022), 박성애·이령(2022), 김덕준·임정빈(2023) 추가하여 재구성.

□ 법·제도적 정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의 2),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제2조의 3).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

3. 민간위탁 유사 제도

□ 유사 제도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

- 민간이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와 재화의 공급 방식이 민간위탁 외에도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행사업, 공공위탁사업, 이양, 아웃소싱 등 매우 다양함.
- 다양한 민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민간위탁과 개념적으로 혼용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정창수 외 2021, 7-11).
- 특히 행정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소재, 예산 등 비용부담 문제 등 법적·재정적 효과가 다양하므로, 유사 개념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서울시 2022, 8-10).
- 다른 한편,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한 수단이라는 맥락에서 광의로 해석하여 운영의 민간회사 이관,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자 및 개발, 시설의 임대 또는 부분적 매각, 시설의 경제적 성과 제고, 공공서비스의 경쟁도입, 조직재설계, 현금 및 부채관리의 효율화, 공기업의 매각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이해하는 경우도 있음(행정자치부 2003, 20-22).
- 그러나, 서비스공급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활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한 부류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민영화는 민간사업자가 행정사무에 대한 권한 및 자본자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결정 및 수행하고 그 책임과 결과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이에 비해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책임도 행정기관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음(최철호 2013, 22).

□ 공공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공공단체·공공기관)에 사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위탁은 수탁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고, 민간위탁은 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서울시 2022, 10).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구체적인 공공위탁의 범위 규정. 상하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등이 해당하며 운영비의 50%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업도 포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 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

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공공위탁은 위임사무를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민간위탁보다 공공성이 요구되며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기 어렵고 행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함(정창수 외 2021, 7).

□ 용역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서울시 2022, 8).
- 주로 단순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완료되거나 부수적 사무일 때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유기동물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방역소독 등의 사업이 해당(정창수 외 2021, 7).
- 용역이 단순하고 부수적인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행

- 대행은 행정의 법령상 의무를 대행기관이 수행하나, 그 권한은 행정에 귀속되어 행정의 책임하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즉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의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목과 책임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인 권한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위탁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서울시 2022, 9).

- 대행과 민간위탁의 개념상 차이는 권한의 법률적 효과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여부에 있음.

□ 사용수익허가

- 행정자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자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행정자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자산을 일정 기간 유·무상으로 민간이 사용할수록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민간은 해당 행정자산을 사용,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음.
- 민간위탁도 시설운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와 유사하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적재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서울시 2022, 9).

□ 지방보조사업

-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보조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등의 예산 항목으로 지원(정창수 외 2021, 9).

-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비영리, 공익성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는 데 차이가 있음(서울시 2022, 8).

□ 위임

- 위임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며, 위임에 대한 정의는 「행정위임위탁 규정」에 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정의)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광의적 차원에서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 광의 권한의 위임 중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위임하는 것을 협의 권한의 위임이라 하며, 지휘·감독에 있지 않은 행정기관이나 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을 권한의 위탁이라 함(이경환·장교식 2023, 325).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정의)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위임과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수입·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다는 점에서 같으나, 위임이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나, 민간위탁은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수평 관계 간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행자부 2003, 5).

[표 2] 민간위탁과 주요 유사 제도

구분	기준	내용
민간위탁 對 공공위탁	• 경쟁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쟁적 시장구조 하에 경쟁원리 적용 ▲ 공공위탁은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쟁원리 적용이 어려움
민간위탁 對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권리 및 비의무성 • 능률성 및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않는 사무 중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 ▲ 용역은 단순반복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민간위탁 對 대행	•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의 책임과 명의하에 행사 ▲ 대행은 행정기관이 책임과 명의를 보유하여 권한을 행사하되 실무를 대행기관이 집행
민간위탁 對 사용수익허가	•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은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허가받은 자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對 보조사업	• 소관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사무를 민간이 위탁 운영 ▲ 보조사업은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예산 등을 지원
민간위탁 對 위임	• 이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은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수평 관계 간 발생 ▲ 위임은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상하 관계에서 발생

출처 : 정창수 외 (2021) 바탕으로 추가.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 공공위탁, 용역, 대행, 사용수익허가,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요한 개념적 특성으로는 첫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 둘째, 공공·공익성 셋째, 시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사무, 넷째,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사무, 다섯째, 능률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탁자 선정 여섯째, 수탁기관의 명목과 책임 하에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서울시 2022, 11).

4. 민간위탁의 제도적 근거

□ 민간위탁의 제도적 근거

- 민간위탁은 법률이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함.
-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와 행정재산에 관한 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한편,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024년 9월 현재, 민간위탁과 관련한 독립적인 상위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3건의 민간위탁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입법이 발의되지 않았음.

□ 개별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제도 시행

- 행정안전부가 2016년 실시한 중앙부처의 민간위탁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위탁 건수의 96.7%인 1,693건이 개별 법령에 근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
- 현재 대다수의 민간위탁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근로복지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 다수의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운용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규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위임위탁규정

- 민간위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명시.
 - 「행정위임위탁규정」은 1970년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1982년 12월 11일 전부개정을 통해 포함됨(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의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지휘·감독, 사무편람, 처리 상황의 감사 등에 관한 것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음.
 - 1983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제정된 이래 2020년 7월 1일 「부산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2023년 현재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전역에서 기본조례 성격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외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정하여 민간위탁제도 운영.
- 민간위탁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민간위탁이 다양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도 민간위탁 기본조례 외에 환경기초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 등 특정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 중.

□ 울산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 울산광역시에는 울산광역시와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중구와 북구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 및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울산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주요 조항 비교

	울산시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사전적정성 검토	○	○	○
의회 동의 및 보고	○	○	○
성과평가	○	○	—
재계약·재위탁 절차	○	○	—
정보공개	—	○	—
회계감사	—	—	—
종사자 보호	△	△	—

5. 민간위탁 주요 내용

□ 민간위탁 주요 사무 기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한정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시장은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 행자부는 민간위탁 실무편람(2003)을 통해 민간위탁 대상 항목 제시.
민간위탁 대상은 지방행정의 핵심부문을 제외한 여러 영역에서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표 3] 행자부 민간위탁 사무 기준 및 사업 유형

민간위탁 사무 기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예시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집행기능	●주차위반차량 견인 및 관리, 도로유지·보수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시설 관리, 식당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비권력적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 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기능	●건설안전시험, 교량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단순집행적인 시설·장비관리기능	●차량·중장비관리, 청사관리, 조경관리, 방호관리, 가로등·전기시설관리, 통신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서비스 제공기능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민간교육,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민간이 운영시에 운영이 활성화 되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
●비영리사회단체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각종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시장기능을 통해 자원동원이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능	●양묘, 화훼관리, 잠종관리, 원종관리 등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사무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 교육용역사업 등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 기타 간행물 제작 등

- 서울시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사무 영역을 다음과 같이 예시(서울시, 2022).

[표 4]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기준 및 사업 유형

민간위탁 사무 기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예시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등
●비영리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민간이 운영할 경우 보다 활성화되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조사기능	●교량안전점검, 공사감리 등

- 더불어 서울시는 민간위탁 제한 영역으로는 첫째,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둘째,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셋째, 위탁 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넷째,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상 “위탁”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 제시를 통해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서울시 2022, 16).
- 감사원은 민간위탁 사무를 조사·확인 사무, 신고·등록 사무, 인증·검사 사무, 정보관리, 관리·운영 사무, 교육·훈련 사무, 평가·공시 사무, 기타 사무 등 기능별로 8개로 유형화한 바 있음(2015). 감사원의 유형화는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류 틀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를 6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분류(감사원 2020).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는 주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민간위탁 분야별 사업 유형

구분	사업 유형
• 공공시설	•재활용센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수거, 하수 및 폐수 처리장, 주차장 운영 등
• 공공안전	•주차위반 차량 견인 및 관리 등
• 보건 및 인적서비스	•종합복지관,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시설, 시립병원 운영 등
• 공원 관리 및 오락	•테니스장, 수영장, 청소년회관, 체육센터, 유스호스텔 운영 등
• 문화 및 예술	•공공도서관, 민속예술관, 문예회관 운영 등
• 일반행정	•세금고지서 전달, 상수도 검침 등

□ 민간위탁 사무 내용

- 행정위임위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종합했을 때, 민간위탁은 정책적 판단이나 행정권한의 강제가 필요한 영역 보다는 단순한 업무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업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
- 이런 측면에서 OECD에서도 정책결정 업무일수록 민간위탁에 덜 적합하며, 서비스전달 업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 업무라고 평가(김정해 외 2015, 31).
- 민간위탁 사무 유형은 복지시설에서부터 교통·주차,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음. 서울시는 시립병원, 산업지원 시설,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영어마을 운영 사무 등 포괄하는 범위가 더욱 넓음.
- 울산시나 울산 북구는 조례에 사무 기준이나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민간위탁 유형

- 위탁은 법률에 의해서 권한의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며, 그에 따라 민간위탁은 법정 위탁과 계약위탁 내지 지정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음(최철호 2013, 31).
- 해당 사무의 근거법령, 그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탁지원금의 유무와 형태 등에 따라 민간위탁을 구분할 수 있으며, 크게 사무의 위탁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등의 시설(행정재산)을 함께 지원하는 시설·사무위탁형, 사무의 위탁만 있을 뿐 시설의 지원이 없는 사무위탁형, 단순한 시설관리, 노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용역 위탁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곽상민 2019, 이경환·장교식 2023, 325 재인용).
- 투자비 및 운영비 조달, 민간책임과 자율성 수준, 민간자본의 필요 정도, 비용지불 방법 및 가격결정 책임 등의 준거에 따라서도 유형화할 수 있음.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일부 특정서비스만 민간위탁하는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 경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경영계약(management contract), 완전한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임대계약(lease contract), 양여 계약(concession)으로 유형화(행자부 2003, 20-22).

○ 또한, 민간위탁제도는 행정의 예산지원 여부에 따라 크게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으로 구분되며, 다시 예산지원형은 시설 운영 포함 여부에 따라 시설형, 사무형 위탁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정병준·황원실·양세종 2018, 11~12). 시설형 민간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해당 시설과 관련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 사무형 민간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수반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수익창출형을 자립형으로 유형화하였음. 자립형 민간위탁은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서울시 2022, 18).

○ 이에 더해 협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확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향의 사무와 사회혁신 사무 등을 담당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중간지원조직형 추가되고, 협치형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기도 함.

□ 민간위탁 대상기관(민간수탁기관) 선정기준

○ 행정위임위탁규정에서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제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울산시는 조례에 수탁 기관의 선정 기준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포함했으며, 울산시 북구에서도 20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음.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위탁한 사무를 같은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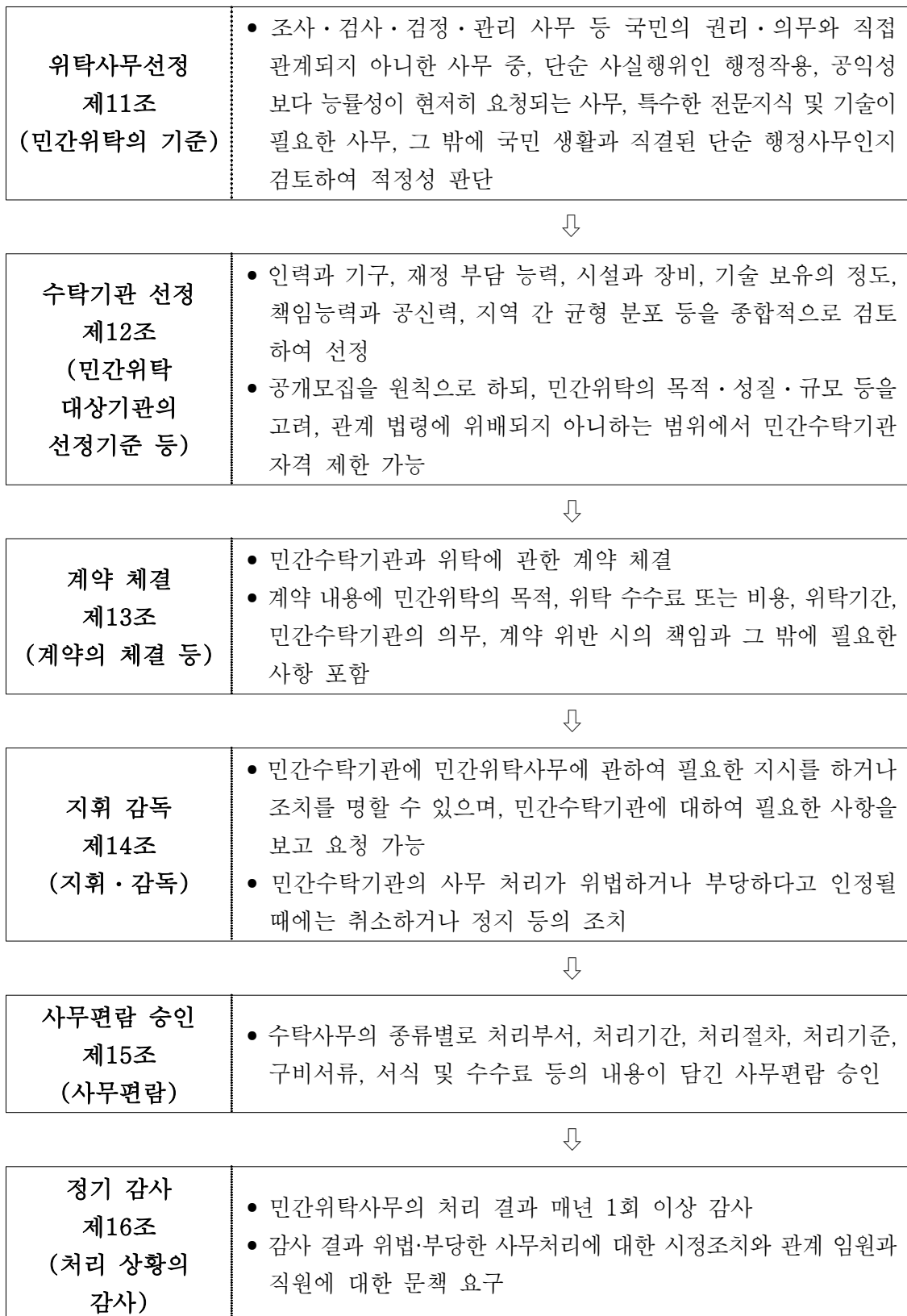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민간위탁 주요 절차

- 민간위탁 절차는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등 위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함.
- 민간위탁기본법이 부재한 가운데, 민간위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민간위탁 주요 절차



○ 이런 기본 절차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및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추진.

- 울산시 북구는 자체적인 민간위탁지침이 없어 신규 및 재위탁·재계약 절차에 관한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III. 민간위탁 현황 분석

1. 민간위탁 예산 현황

1) 분석방법

□ 전체 예산 중 민간위탁금(307-05) 기준

○ 예산 항목 중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민간에 지급되는 이전 성격의 예산 항목은 ‘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항목을 포괄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308-1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 실제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성 사업은 민간위탁금(307-05)외에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위탁사업비(402-03)등의 예산 항목으로 운영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예산항목은 민간위탁금(307-05)으로 한정됨.

[표 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정의

민간위탁금(307-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이에 따라 울산시 북구의 민간이전 사업 예산 항목에서 명확한 민간위탁 사업의 분석을 위해 민간위탁금(307-05)으로 한정함.
- 다만, 울산시 북구의 민간이전성 예산 현황에서 민간위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이전성 예산 현황을 보았음.
- 2024년 울산시 북구의 민간이전성 예산 총액은 1,627억4,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3.59%를 차지하고 있음.

[표 7] 2024년 울산시 북구 민간이전 경비 현황

(단위 : 천원, %)

예산항목		금액	비중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6,542,345	1.3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724,734	0.15%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480,400	0.31%
민간위탁금	307-05	75,479,527	15.5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46,276,761	9.55%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20,880,418	4.31%
민간인위탁교육비	307-12	46,400	0.0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3	1,854,668	0.38%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1	734,000	0.15%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2-02	3,440,686	0.71%
민간위탁사업비	402-03	3,863,333	0.8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1,423,129	0.29%
합계		162,746,401	33.59%

출처: 울산시 북구 2024년 예산서(본예산 기준)

2) 예산현황

□ 2024년 민간위탁금액은 755억, 예산 비중은 15.58%

[표 8] 최근 5년간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총액(A)	민간위탁금(B)	비중(B/A)
2020	373,435,078	62,983,998	16.87
2021	395,383,980	68,540,189	17.34
2022	440,714,248	72,769,848	16.51
2023	478,572,927	75,938,576	15.87
2024	484,545,503	75,479,527	15.58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제출자료

- 2024년 본예산 기준 울산시 북구 예산총액은 4,845억원이고 이 가운데 민간위탁금은 755억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비중은 15.58%임.
- 민간위탁금액은 2020년 630억에서 매년 늘어나 2023년 759억에 이르렀으나 2024년 755억으로 전년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음.
- 예산 총액에서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87%에서 2021년 17.34%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조금씩 감소해 2024년에는 15.58% 수준임.

□ 5개 자치단체 중 민간위탁금 비중 2위

- 2024년 본예산 기준 울산광역시 5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금액은 남구 6,640억원으로 1위, 울주군 781억원으로 2위이고, 북구는 755억원으로 3위에 해당함. 중구가 589억원으로 4위, 동구가 496억원으로 5위임.
- 예산 총액에서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구가 16.32%로 1위이고 북구가 15.58%로 2위 수준임. 동구가 13.0% 3위, 중구가 11.73%로 4위, 울주군이 6.73%로 5위임.

[표 9] 울산광역시 각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현황 비교

자치구/군	예산총액(A)	민간위탁금(B)		민간위탁금 비중(B/A)	
		금액	순위	비중(%)	순위
북구	484,545,503	75,479,527	3	15.58	2
남구	664,018,729	108,355,005	1	16.32	1
동구	381,786,456	49,635,049	5	13.00	3
울주군	1,161,479,345	78,148,751	2	6.73	5
중구	502,041,361	58,878,698	4	11.73	4

출처: 울산광역시 각 자치단체별 2024년 예산서(본예산 기준)

3) 전국 민간위탁 예산 현황

(1) 전국 민간위탁 예산 변화

2020년 ~ 2024년 간 민간위탁금액은 증가했으나 그 비율은 감소함.

- 2020년 전국 지자체 예산, 사회보장성 수혜금, 민간위탁금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여기서 언급하는 민간 위탁금은 각 지자체 본예산 통계목별 세출 기준에서 307-05에 속하는 전체 예산액을 의미함.
- 민간위탁금은 전체 세출 규모와의 비율로 그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2024년 기준 민간위탁금 비율과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 즉,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전체 예산대비 사회보장성 수혜금액) 많아지면 민간위탁금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함¹⁾. 이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지자체 예산, 사회보장성 수혜금액, 민간위탁금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2020년 전국 지자체 총계기준 본예산 금액은 345조원에서 433.9조원으로 25.8% 증가했음. 같은 기간 사회보장성 수혜금은 38.7조원에서 59.8조원으로 54.5% 증가했음. 반면, 같은 기간 민간위탁금은 12.8조원에서 13.1조원으로 2.2% 증가에 불과함.
- 한편, 전국 기초지자체 총계예산 본예산 금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1조원에서 91.7조원으로 29.1% 증가했음. 같은 기간 사회보장성 수혜금은 16.2조원에서 59.8조원으로 50.3% 증가하는 동안 민간위탁금은 3.5조원에서 4.5조원으로 28.2% 증가했음.
- 즉,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는 예산증가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사회보장성 수혜금이 증가하는 동안에도 민간위탁금은 거의 정체해서 전체 민간위탁금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

1)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출연금, 경상사업보조금, 법정운영비보조금 등은 민간위탁금 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

○ 반면, 기초지자체 민간 위탁금(28.2%)은 전체 예산 증가율(29.1%)과 비슷한 정도로 증가했으며, 사회보장성 수혜금 증가율(50.3%)에는 하회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전체 세수 대비 민간위탁금 비율은 2020년 4.9%에서 2024년 4.9%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표 10] 2020~2024년 전국 지자체 예산, 사회보장성수혜금, 민간위탁금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합계	사회보장성 수혜금	민간 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 금 대비 사회보장성 수혜금
2024	전국계	433,901,361	59,777,218	13,086,409	13.8%	3.0%	21.9%
	광역시	283,679,015	39,785,417	9,097,788	14.0%	3.2%	22.9%
	기초계	91,718,535	24,326,358	4,468,570	26.5%	4.9%	18.4%
2023	전국계	423,940,963	54,928,506	12,713,452	13.0%	3.0%	23.1%
	광역시	278,900,403	35,246,722	8,961,586	12.6%	3.2%	25.4%
	기초계	88,468,416	22,017,486	4,209,469	24.9%	4.8%	19.1%
2022	전국계	400,103,588	46,793,101	12,059,331	11.7%	3.0%	25.8%
	광역시	263,364,272	31,350,405	8,417,558	11.9%	3.2%	26.8%
	기초계	82,580,879	19,570,390	3,858,212	23.7%	4.7%	19.7%
2021	전국계	365,713,614	42,012,752	12,854,036	11.5%	3.5%	30.6%
	광역시	239,758,904	28,068,946	9,448,337	11.7%	3.9%	33.7%
	기초계	75,681,377	17,691,213	3,653,062	23.4%	4.8%	20.6%
2020	전국계	345,019,731	38,689,372	12,803,942	11.2%	3.7%	33.1%
	광역시	229,951,867	25,925,108	8,951,754	11.3%	3.9%	34.5%
	기초계	71,017,756	16,190,022	3,486,457	22.8%	4.9%	21.5%
*증가율	전국계	25.8%	54.5%	2.2%			
	광역시	23.4%	53.5%	1.6%			
	기초계	29.1%	50.3%	28.2%			

* 2020년 대비 2024년 예산 증가율

(2) 전국 민간위탁 연도별 예산 변화

□ 2020년 전체예산, 사회보장성 수혜금, 민간위탁금

- 2020년 전국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은 71조원에서 민간위탁금은 3.5조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민간위탁금 비율은 4.9% 였음.
- 민간위탁금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울산기초지자체로 전체 울산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은 13.7%로 전체 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 4.9%를 크게 초과함. 울산기초지자체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민간위탁금 비율을 편성한 지자체는 부산 기초지자체 7.6%, 서울 기초지자체 6.9%로 울산기초지자체의 민간위탁금 비율과 큰 차이가 있음.
- 반면, 대전 기초지자체 및 전남 기초지자체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각각 558억원, 3113억원만 편성해 전체 예산액 중 단 2.1%, 2.3%만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울산기초지자체 중에서 민간위탁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남구로 총 5195억원 예산 중, 민간위탁금액이 989억원으로 19%에 달함. 울산 북구는 3734억원 중, 630억원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해 16.9%를 차지함. 울주군은 9046억원 중, 645억원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7.1%의 민간위탁금 비율이 가장 낮음.
-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이 높으면 민간위탁금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성 수혜금 대비 민간위탁 비율도 구해보고자 함.
- 우리나라 전체 기초지자체 사회보장성 수혜금 대비 민간위탁 비율은 21.5%임. 반면, 울산기초지자체의 사회보장성 수혜금 대비 민간위탁 비율은 60.2%로 압도적 1위임. 민간위탁비율이 가장 낮은 대전 기초지자체의 사회보장성 수혜금 대비 민간위탁 비율은 5.4%에 지나지 않음.
- 울산기초지자체 전체 사회보장성 수혜금 대비 민간위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북구(74.2%), 울산 동구(68.6%)임. 반면, 울산 중구는 울주군(52%) 보다 낮은 47.1%에 머물렀음.

[표 11] 2020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2020년	합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 사회보장수혜금
전국계	345,019,731	38,689,372	12,803,942	11.2%	3.7%	33.1%
전국광역계	229,951,867	25,925,108	8,951,754	11.3%	3.9%	34.5%
전국기초계	71,017,756	16,190,022	3,486,457	22.8%	4.9%	21.5%
서울기초합	17,502,728	5,092,667	1,208,538	29.1%	6.9%	23.7%
부산기초합	6,478,832	2,667,645	493,419	41.2%	7.6%	18.5%
대구기초합	15,839,693	2,074,771	456,915	13.1%	2.9%	22.0%
인천기초합	6,151,731	1,785,538	342,721	29.0%	5.6%	19.2%
광주기초합	2,565,258	863,228	149,916	33.7%	5.8%	17.4%
대전기초합	2,683,290	1,040,142	55,789	38.8%	2.1%	5.4%
울산본청	3,859,012	21,136	160,079	0.5%	4.1%	757.4%
울산기초합	2,470,119	560,728	337,801	22.7%	13.7%	60.2%
울산중구	381,728	124,330	58,618	32.6%	15.4%	47.1%
울산남구	519,499	150,443	98,873	29.0%	19.0%	65.7%
울산동구	290,903	77,067	52,836	26.5%	18.2%	68.6%
울산복구	373,435	84,840	62,984	22.7%	16.9%	74.2%
울산울주군	904,554	124,048	64,490	13.7%	7.1%	52.0%
세종본청	1,605,096	150,587	66,393	9.4%	4.1%	44.1%
경기기초합	41,412,622	8,937,319	2,439,415	21.6%	5.9%	27.3%
강원기초합	10,349,335	1,515,673	368,318	14.6%	3.6%	24.3%
충북기초합	8,030,372	1,436,067	352,778	17.9%	4.4%	24.6%
충남기초합	11,269,828	1,697,845	463,966	15.1%	4.1%	27.3%
전북기초합	11,129,593	2,085,976	541,951	18.7%	4.9%	26.0%
전남기초합	13,370,463	2,046,849	311,251	15.3%	2.3%	15.2%
경북기초합	16,827,590	2,687,236	759,707	16.0%	4.5%	28.3%
경남기초합	16,323,281	2,671,096	545,085	16.4%	3.3%	20.4%
제주본청	5,822,869	518,462	147,943	8.9%	2.5%	28.5%

□ 2021년 전체예산, 사회보장성 수혜금, 민간위탁금

- 2021년 전국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은 75.7조원에서 민간위탁금은 3.7조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민간위탁금 비율은 4.8%로 전년 4.7%보다 다소 하락했음.
- 민간위탁금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울산기초지자체로 전체 울산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은 13.8%로 전체 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 4.8%를 크게 초과함.
- 다만, 울산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4.5% 증가하여 전국기초지자체 증가율 4.8%보다 다소 하회함.
- 울산 북구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에 비해 8.8%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7.3%를 차지함.

[표 12] 2021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2021년	합계	사회보장성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금 증가율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전국계	365,713,614	42,012,752	12,854,036	11.5%	3.5%	0.4%	30.6%
전국광역시	239,758,904	28,068,946	9,448,337	11.7%	3.9%	5.5%	33.7%
전국기초계	75,681,377	17,691,213	3,653,062	23.4%	4.8%	4.8%	20.6%
서울기초합	18,669,600	5,633,873	1,306,023	30.2%	7.0%	8.1%	23.2%
부산기초합	6,903,504	2,886,669	484,913	41.8%	7.0%	-1.7%	16.8%
대구기초합	16,857,050	2,245,951	458,263	13.3%	2.7%	0.3%	20.4%
인천기초합	6,439,019	1,975,928	378,482	30.7%	5.9%	10.4%	19.2%
광주기초합	2,821,998	960,654	171,720	34.0%	6.1%	14.5%	17.9%
대전기초합	2,876,155	1,121,065	61,432	39.0%	2.1%	10.1%	5.5%
울산본청	4,066,118	25,705	241,133	0.6%	5.9%	50.6%	938.1%
울산기초합	2,558,846	604,285	353,083	23.6%	13.8%	4.5%	58.4%
울산중구	402,459	134,700	60,342	33.5%	15.0%	2.9%	44.8%
울산남구	537,315	155,730	104,412	29.0%	19.4%	5.6%	67.0%

2021년	합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금 증가율	민간위탁 사회보장성 수혜금
울산동구	291,282	82,089	51,165	28.2%	17.6%	-3.2%	62.3%
울산북구	395,384	91,294	68,540	23.1%	17.3%	8.8%	75.1%
울산울주군	932,406	140,472	68,624	15.1%	7.4%	6.4%	48.9%
세종본청	1,817,285	164,954	74,590	9.1%	4.1%	12.3%	45.2%
경기기초합	41,867,366	9,696,902	2,582,544	23.2%	6.2%	5.9%	26.6%
강원기초합	11,089,635	1,696,979	376,750	15.3%	3.4%	2.3%	22.2%
충북기초합	8,444,101	1,552,875	398,708	18.4%	4.7%	13.0%	25.7%
충남기초합	11,989,759	1,875,334	505,743	15.6%	4.2%	9.0%	27.0%
전북기초합	12,052,930	2,215,446	544,478	18.4%	4.5%	0.5%	24.6%
전남기초합	13,848,266	2,186,109	336,887	15.8%	2.4%	8.2%	15.4%
경북기초합	17,601,190	2,878,155	836,790	16.4%	4.8%	10.1%	29.1%
경남기초합	17,220,426	2,882,302	558,463	16.7%	3.2%	2.5%	19.4%
제주본청	5,829,868	547,408	167,432	9.4%	2.9%	13.2%	30.6%

□ 2022년 전체예산, 사회보장성 수혜금, 민간위탁금

- 2022년 전국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은 2021년 75.7조원에서 82.6조원으로, 민간위탁금은 2021년 3.7조원에서 2022년 3.9조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민간위탁금 비율은 4.7%로 전년 4.8%보다 다소 하락했음.
- 민간위탁금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울산기초지자체로 전체 울산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은 12.9%로 전체 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 4.7%를 크게 초과함.
- 다만, 울산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0.3% 감소하여 전국기초지자체 증가율 5.6%와 차이가 있음.
- 울산 북구 민간위탁금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년 17.3%에서 22년 16.5%로 감소함.

[표 13] 2022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2022년	합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금 증가율	민간위탁 사회보장성 수혜금
전국계	400,103,588	46,793,101	12,059,331	11.7%	3.0%	-6.2%	25.8%
전국광역시	263,364,272	31,350,405	8,417,558	11.9%	3.2%	-10.9%	26.8%
전국기초	82,580,879	19,570,390	3,858,212	23.7%	4.7%	5.6%	19.7%
서울기초	20,562,429	6,373,363	1,396,829	31.0%	6.8%	7.0%	21.9%
부산기초	7,612,740	3,173,478	514,530	41.7%	6.8%	6.1%	16.2%
대구기초	18,446,034	2,422,708	470,394	13.1%	2.6%	2.6%	19.4%
인천기초	7,013,354	2,187,850	433,914	31.2%	6.2%	14.6%	19.8%
광주기초	3,318,230	1,234,820	183,210	37.2%	5.5%	6.7%	14.8%
대전기초	3,265,236	1,277,188	72,785	39.1%	2.2%	18.5%	5.7%
울산본청	4,410,392	36,834	284,484	0.8%	6.5%	18.0%	772.3%
울산기초	2,725,409	682,477	351,908	25.0%	12.9%	-0.3%	51.6%
울산중구	419,974	151,694	59,366	36.1%	14.1%	-1.6%	39.1%
울산남구	575,846	179,771	102,875	31.2%	17.9%	-1.5%	57.2%
울산동구	317,652	97,118	47,016	30.6%	14.8%	-8.1%	48.4%
울산북구	440,714	102,137	72,770	23.2%	16.5%	6.2%	71.2%
울산울주군	971,223	151,757	69,881	15.6%	7.2%	1.8%	46.0%
세종본청	1,921,328	193,662	77,308	10.1%	4.0%	3.6%	39.9%
경기기초	45,523,650	10,991,137	2,853,541	24.1%	6.3%	10.5%	26.0%
강원기초	11,838,605	1,891,244	412,525	16.0%	3.5%	9.5%	21.8%
충북기초	9,464,358	1,653,111	430,284	17.5%	4.5%	7.9%	26.0%
충남기초	13,150,958	2,040,578	552,357	15.5%	4.2%	9.2%	27.1%
전북기초	12,853,145	2,340,718	603,787	18.2%	4.7%	10.9%	25.8%
전남기초	15,105,509	2,331,274	375,891	15.4%	2.5%	11.6%	16.1%
경북기초	19,147,258	3,132,148	868,675	16.4%	4.5%	3.8%	27.7%
경남기초	18,660,208	3,118,189	593,543	16.7%	3.2%	6.3%	19.0%
제주본청	6,392,245	604,310	180,329	9.5%	2.8%	7.7%	29.8%

□ 2023년 전체예산, 사회보장성 수혜금, 민간위탁금

- 2023년 전국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은 2022년 82.6조원에서 88.5조원으로, 민간위탁금은 2022년 3.9조원에서 2023년 4.2조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민간위탁금 비율은 4.8%로 전년 4.7%보다 다소 증가함.
- 민간위탁금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울산 기초지자체로 전체 울산 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은 11.8%로 전체 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 4.8%를 크게 초과함.
- 다만, 울산 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증가율은 3%에 머물러 전국 기초지자체 증가율 9.1%는 물론 울산 기초지자체 예산 증가율(12.6%)에 못 미침.
- 울산 복구는 민간위탁금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년 16.5%에서 23년 15.9%로 감소함.

[표 14] 2023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2023년	합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금 증가율	민간위탁 사회보장성 수혜금
전국계	423,940,963	549,285,06	127,134,52	13.0%	3.0%	5.4%	23.1%
전국광역시	278,900,403	35,246,722	8,961,586	12.6%	3.2%	6.5%	25.4%
전국기초	88,468,416	22,017,486	4,209,469	24.9%	4.8%	9.1%	19.1%
서울기초	22,149,124	7,208,918	1,548,714	32.5%	7.0%	10.9%	21.5%
부산기초	8,261,335	3,567,015	568,565	43.2%	6.9%	10.5%	15.9%
대구기초	19,652,646	2,739,128	495,004	13.9%	2.5%	5.2%	18.1%
인천기초	7,531,171	2,542,339	481,859	33.8%	6.4%	11.0%	19.0%
광주기초	3,445,041	1,250,309	199,018	36.3%	5.8%	8.6%	15.9%
대전기초	3,482,022	1,440,804	80,226	41.4%	2.3%	10.2%	5.6%
울산본청	4,605,899	45,401	110,434	1.0%	2.4%	-61.2%	243.2%
울산기초	3,068,834	793,299	362,545	25.9%	11.8%	3.0%	45.7%
울산중구	446,472	174,320	58,116	39.0%	13.0%	-2.1%	33.3%

2023년	합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금 증가율	민간위탁 사회보장성 수혜금
울산남구	668,925	210,323	108,080	31.4%	16.2%	5.1%	51.4%
울산동구	338,179	109,523	46,904	32.4%	13.9%	-0.2%	42.8%
울산북구	478,573	121,336	75,939	25.4%	15.9%	4.4%	62.6%
울산울주군	1,136,685	177,797	73,506	15.6%	6.5%	5.2%	41.3%
세종본청	2,002,807	221,472	80,886	11.1%	4.0%	4.6%	36.5%
경기 기초합	47,430,907	12,360,322	3,075,607	26.1%	6.5%	7.8%	24.9%
강원 기초합	12,739,690	2,101,731	448,426	16.5%	3.5%	8.7%	21.3%
충북 기초합	10,063,190	1,853,746	465,867	18.4%	4.6%	8.3%	25.1%
충남 기초합	13,811,094	2,308,118	570,432	16.7%	4.1%	3.3%	24.7%
전북 기초합	13,780,332	2,596,675	663,788	18.8%	4.8%	9.9%	25.6%
전남 기초합	16,220,518	2,487,898	420,428	15.3%	2.6%	11.8%	16.9%
경북 기초합	21,103,423	3,514,636	902,783	16.7%	4.3%	3.9%	25.7%
경남 기초합	20,059,194	3,534,594	641,734	17.6%	3.2%	8.1%	18.2%
제주본청	7,063,922	711,618	205,314	10.1%	2.9%	13.9%	28.9%

□ 2024년 전체예산, 사회보장성 수혜금, 민간위탁금

- 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은 2023년 88.5조원에서 91.7조원으로, 민간위탁금은 2023년 4.2조원에서 2024년 4.7조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민간위탁금 비율은 4.9%로 전년 4.8%보다 다소 증가함.
- 민간위탁금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울산기초지자체로 전체 울산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은 11.6%로 전체 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 4.9%를 크게 초과함.
- 다만, 울산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은 전년보다 증가율이 2.2%에 머물러 전국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증가율 6.2%는 물론 울산기초지자체 예산 증가율(4.1%)에 못 미침.

○ 울산광역시 5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민간위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산남구, 울산북구로 각각 16.3%, 15.6%이며 그 뒤를 울산동구(13%), 중구(11.7%), 울주군(6.7%)이 잇고 있음.

○ 전국기초지자체 중 민간위탁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울산은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 7.3%, 경기 6.4%, 부산 6.4%임.

[표 15] 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총예산, 민간위탁금

2024년	합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금 증가율	민간위탁/ 사회보장성 수혜금
전국계	433,901,361	59,777,218	13,086,409	13.8%	3.0%	2.9%	21.9%
전국광역시	283,679,015	39,785,417	9,097,788	14.0%	3.2%	1.5%	22.9%
전국기초계	91,718,535	24,326,358	4,468,570	26.5%	4.9%	6.2%	18.4%
서울기초합	22,995,350	8,048,965	1,683,491	35.0%	7.3%	8.7%	20.9%
부산기초합	8,766,734	3,971,244	559,364	45.3%	6.4%	-1.6%	14.1%
대구기초합	21,014,942	2,998,288	543,151	14.3%	2.6%	9.7%	18.1%
인천기초합	8,038,060	2,918,187	489,049	36.3%	6.1%	1.5%	16.8%
광주기초합	3,542,143	1,306,568	181,986	36.9%	5.1%	-8.6%	13.9%
대전기초합	3,660,336	1,606,495	85,598	43.9%	2.3%	6.7%	5.3%
울산본청	4,793,293	52,365	118,031	1.1%	2.5%	6.9%	225.4%
울산기초합	3,193,871	884,782	370,498	27.7%	11.6%	2.2%	41.9%
울산중구	502,041	191,873	58,879	38.2%	11.7%	1.3%	30.7%
울산남구	664,019	229,737	108,355	34.6%	16.3%	0.3%	47.2%
울산동구	381,786	126,554	49,635	33.1%	13.0%	5.8%	39.2%
울산북구	484,546	137,274	75,480	28.3%	15.6%	-0.6%	55.0%
울산울주군	1,161,479	199,344	78,149	17.2%	6.7%	6.3%	39.2%
세종본청	1,905,978	217,405	86,119	11.4%	4.5%	6.5%	39.6%
경기기초합	48,847,701	13,651,826	3,149,165	27.9%	6.4%	2.4%	23.1%
강원기초합	12,744,893	2,338,338	477,335	18.3%	3.7%	6.4%	20.4%
충북기초합	10,122,168	2,022,996	498,428	20.0%	4.9%	7.0%	24.6%
충남기초합	14,340,249	2,579,500	600,125	18.0%	4.2%	5.2%	23.3%

2024년	합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민간위탁금 증가율	민간위탁/ 사회보장성 수혜금
전북기초합	14,012,268	2,769,476	713,262	19.8%	5.1%	7.5%	25.8%
전남기초합	15,843,570	2,683,356	405,126	16.9%	2.6%	-3.6%	15.1%
경북기초합	21,918,154	3,814,214	954,724	17.4%	4.4%	5.8%	25.0%
경남기초합	20,254,477	3,856,462	695,192	19.0%	3.4%	8.3%	18.0%
제주본청	7,210,363	825,877	228,365	11.5%	3.2%	11.2%	27.7%

□ 소결: 2020년 ~ 2024년 민간위탁금 변화

- 2020년 전국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은 71조원에서 민간위탁금은 3.5조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민간위탁금 비율은 4.9%였음. 그런데 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예산은 91.7조원에서 민간위탁금은 4.5조원으로 전체 예산이 29.1% 증가하는 동안 민간위탁금은 28.2% 증가하여 민간위탁금 비율은 거의 동일한 4.9%를 유지함.
- 울산기초지자체는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예산이 29.3% 증가하는 동안 민간위탁금은 9.7%만 증가하였음. 울산북구는 같은 기간 민간위탁금이 19.8% 증가하였음.
- 울산 기초지자체의 민간위탁금 비율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나 그 정도는 크게 낮아졌음.

[표 16] 2020~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울산 민간위탁금 변화

	2020~2024 예산 증가율	2020~2024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율	2020~2024 민간위탁금 증가율	2020 민간위탁금 비율	2024 민간위탁금 비율
전국계	25.8%	54.5%	2.2%	3.7%	3.0%
전국광역계	23.4%	53.5%	1.6%	3.9%	3.2%
전국기초계	29.1%	50.3%	28.2%	4.9%	4.9%
서울기초합	31.4%	58.1%	39.3%	6.9%	7.3%
부산기초합	35.3%	48.9%	13.4%	7.6%	6.4%
대구기초합	32.7%	44.5%	18.9%	2.9%	2.6%

	2020~2024 예산 증가율	2020~2024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율	2020~2024 민간위탁금 증가율	2020 민간위탁금 비율	2024 민간위탁금 비율
인천기초합	30.7%	63.4%	42.7%	5.6%	6.1%
광주기초합	38.1%	51.4%	21.4%	5.8%	5.1%
대전기초합	36.4%	54.4%	53.4%	2.1%	2.3%
울산본청	24.2%	147.8%	-26.3%	4.1%	2.5%
울산기초합	29.3%	57.8%	9.7%	13.7%	11.6%
울산중구	31.5%	54.3%	0.4%	15.4%	11.7%
울산남구	27.8%	52.7%	9.6%	19.0%	16.3%
울산동구	31.2%	64.2%	-6.1%	18.2%	13.0%
울산북구	29.8%	61.8%	19.8%	16.9%	15.6%
울산울주군	28.4%	60.7%	21.2%	7.1%	6.7%
세종본청	18.7%	44.4%	29.7%	4.1%	4.5%
경기기초합	18.0%	52.8%	29.1%	5.9%	6.4%
강원기초합	23.1%	54.3%	29.6%	3.6%	3.7%
충북기초합	26.0%	40.9%	41.3%	4.4%	4.9%
충남기초합	27.2%	51.9%	29.3%	4.1%	4.2%
전북기초합	25.9%	32.8%	31.6%	4.9%	5.1%
전남기초합	18.5%	31.1%	30.2%	2.3%	2.6%
경북기초합	30.3%	41.9%	25.7%	4.5%	4.4%
경남기초합	24.1%	44.4%	27.5%	3.3%	3.4%
제주본청	23.8%	59.3%	54.4%	2.5%	3.2%

- 한편 2020~2024년 동안 민간위탁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는 경북 본청으로 2020년 6130억원에서 2024년 170억원으로 -97.2% 감소했음.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지난 5년간 민간위탁금이 감소한 지자체는 총 32개임.
- 반면, 2020~2024년 동안 민간위탁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으로 2020년 10억원에서 2024년 40억원으로 291% 증가함.

[표 17] 민간위탁금 증가율 상위/하위 지자체 현황

지자체	2020~2024 민간위탁금 증가율 하위	지자체	2020~2024 민간위탁금 증가율 상위
경북본청	-97.2%	경북영양군	291.2%
대구본청	-57.4%	전남신안군	230.4%
광주서구	-44.2%	전북남원시	199.3%
충남논산시	-42.1%	강원횡성군	127.3%
광주본청	-41.9%	충북옥천군	120.3%
강원동해시	-40.0%	전북순창군	113.2%
부산사하구	-34.0%	부산서구	106.7%
전남보성군	-33.6%	서울성동구	106.4%
경남하동군	-31.7%	경기여주시	105.0%
전북완주군	-27.3%	전남강진군	98.8%
부산강서구	-27.3%	전남완도군	96.4%
경남산청군	-27.0%	광주동구	94.2%
울산본청	-26.3%	대전서구	90.4%
서울도봉구	-26.2%	강원인제군	90.4%
경남합천군	-24.2%	전남영광군	90.0%
전남본청	-22.1%	경북청도군	86.5%
경북경주시	-17.9%	서울서대문구	84.0%
경남창녕군	-17.7%	서울광진구	83.8%
경기이천시	-15.0%	충남계룡시	82.9%
전남담양군	-14.2%	경북영천시	82.7%
전남영암군	-14.1%	전남진도군	82.2%
부산본청	-12.3%	대구군위군	81.6%
경북구미시	-11.4%	서울금천구	80.0%
경남거창군	-11.3%	경북봉화군	79.8%
전북정읍시	-10.5%	강원태백시	78.8%
충북단양군	-10.3%	전남곡성군	78.2%
인천서구	-8.8%	충북보은군	77.5%
대구달서구	-8.0%	전북장수군	76.4%
전남목포시	-7.3%	대구남구	75.6%
울산동구	-6.1%	전남함평군	75.1%
부산기장군	-6.0%	강원화천군	73.6%
전남무안군	-1.9%	인천남동구	73.1%

(3) 울산 북구 민간위탁금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이유

□ 울산 북구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성 지원금

- 2024년 울산북구 전체 민간위탁금 예산은 755억원임. 이중, 0-2세 보육료지원 예산 및 3-5세 보육료지원 예산이 총 359억원으로 전체 민간위탁 예산의 약 절반(47.6%)을 차지함.
- 울산동구도 0-2세보육료를 민간위탁(307-05)로 편성하고 있고 3-5세 보육료(누리과정보육료)도 민간위탁(307-05)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즉, 울산 북구뿐만아니라 울산 동구등 울산 기초지자체는 0-2세보육료 및 3-5세 보육료 모두 민간위탁 목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 두 개 세부사업이 울산 북구 민간위탁금 전체 총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일종의 예외값(outlier)임. 저출생 등으로 울산 북구의 보육료 예산액이 감소하면 전체 민간위탁 예산이 줄어들고, 정부 정책 등으로 보육료 지원 예산이 증가하면 전체 민간위탁 예산 통계가 증가하는 일종의 통계 착시효과가 발생함.
- 또한, 위 보육료 지원금을 포함하여 의료관련 지원금, 장애인활동 지원금, 사회서비스지원금 등 정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 사회복지성 지원금은 총 520억원으로 울산 북구 민간위탁금 총액 755억원의 68.9%를 차지함.

[표 18] 울산 북구 민간위탁사업 중 사회복지성 지원금 현황

위탁사업명	수탁자(단체)	위탁금(천원)
국가암검진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18,551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14,050
결핵관리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2,596
치매치료비관리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64,00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220,8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913,57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80,00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43,132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340
0-2세 보육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8,132,907
3-5세 보육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7,800,000
보육료 차액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846,300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65,980
부모급여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600,000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0,65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71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2,00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55,71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005,122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64,286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60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39,878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75,99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7,314,28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바우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20,83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 (생활)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24,69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7,756
합계		51,996,338

□ 대전광역시 소속 기초지자체 민간위탁 사업 분석

- 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이 4.9%인데 비해 대전기초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은 2.3%로 가장 낮음. 이에 대전광역시 소속 기초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 통계를 분석해보고자 함.
- 2024년 대전 동구 영유아보육료 예산은(0-2세 보육료) 151억원, 누리과정보육료(3-5세 보육료)는 47억원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2024년 대전 동구 예산서를 통해 영유아보육료 예산 편성 목을 확인결과 301-01(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누리과정 보육료도 301-02(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마찬가지로 대전 유성구도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301-01, 누리과정보육료 예산은 301-02로 편성하고 있음.
- 즉, 대전 동구와 유성구 등 대전 기초지자체는 영유아보육료 예산 및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민간위탁(307-05)목이 아니라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로 편성하고 있음.
- 또한, 대전 유성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도 2024년 본예산 기준 총 31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항목이 301-01로 편성되어 있어 민간위탁목으로 편성한 울산 복구와 차이가 있음.

□ 서울 등 타 지자체 사업 분석

- 2024년 서울 강남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총 25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되어 있으며, 누리과정보육료지원사업은 총 10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되어 있음.
-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구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도 총 429억원이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되어 있음.

- 2024년 서울 강북구 1-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128억원이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누리과정 지원금액 총 78억원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되어 있음.
- 즉,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관행적으로 분류 방식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소결 : 울산 북구 민간위탁금 비중이 높은 이유

- 전국적으로 민간위탁금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의 동구와 유성구 현황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과 장애인활동 지원 등 사회복지성 지원금을 예산항목상 민간위탁(307-05)목이 아니라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목으로 편성해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강남구와 강북구는 보육료 지원과 장애인활동 지원 등 사회복지성 지원금을 예산항목상 민간위탁(307-05)목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목으로 편성해 관리하고 있음.
- 만약 울산 북구의 민간위탁금 가운데, 보육료 지원금이나 장애인활동 지원금 등 사회복지성 지원금을 대전과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처럼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이나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한다면, 2024년 현재 울산 북구의 민간위탁금(307-05)은 235억으로 대폭 줄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임.

[표 19] 기초지자체별 민간위탁금 비율 비교

자치단체 종류	민간위탁금(천원)	민간위탁금 비율
전국기초자치단체계	4,468,570	4.9%
서울기초자치단체합	1,683,491	7.3%
부산기초자치단체합	559,364	6.4%
대구기초자치단체합	543,151	2.6%
인천기초자치단체합	489,049	6.1%
광주기초자치단체합	181,986	5.1%
대전기초자치단체합	85,598	2.3%
울산기초자치단체합	370,498	11.6%
울산복구	75,480	15.6%
울산복구(수정)*	23,483	4.8%

* 울산복구(수정)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성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임.

2. 민간위탁 사업 현황

1) 분석방법

□ 선행연구 확인

-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환경, 교통, 사회복지 및 의료, 문화체육, 행정지원 등 다섯 가지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송근원·김태성, 2002).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 유형으로 시설관리와 사무를 모두 위탁하는 시설형과 사무 중심의 위탁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분야, 유형별 분류 등 방법 활용

- 울산시 북구 전체 민간위탁 사업을 정해진 양식(엑셀 별도양식 참고)에 따라 현황 파악 후 각 사업을 보건복지, 청소환경, 경제일자리, 문화체육, 교육청소년, 기타행정 등 위탁분야별과 시설운영, 사무수행 등 위탁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이외에도 위탁사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관부서, 유형, 분야, 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선정방법, 성과평가여부, 의회 동의 여부 등 다양한 특성별로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음.

□ 조사 기준일 : 2024.9.30.

[그림 2] 민간위탁사업 현황 분석 양식

2024년도 울산시 복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작성방법
-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용원) 기준
- 각 부서 민간위탁금(307-05) 기준

분야 구분 기재
○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 등 기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 의료, 보건, 건강증진, 문화예술, 체육, 교육 관련 사업
○ 사회복지, 직업훈련, 공공주택, 관광사업, 문화·교류, 행사문화 등 분야 기재

연번	소관 부서명	분야	위탁사업명	주요 위탁업무	수탁자(단체)	최초 위탁시작일	현 위탁시작일	위탁기간	현수직자와 재계약 필수	위탁금(천원)
1	국무과	복합	000가정봉사단 운영	* 가정봉사단의 모집 및 교육관리 * 가정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운영 * 1대1가정봉사단 운영 등 운영 * 가정봉사 부원기금 관리(회계프로그램)	000가정회	2004.1.1	2023.1.1	2년	1회 연장	175,552
2										
3										
4										
5										
6										
7										
8										
9										
10										
11										

Windows 정품 인증

최근 5년간 민간위탁금 현황(가목별) 2023년도 민간위탁 현황(연부서)

□ 영역별 사업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분야, 유형 등으로 구분한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영역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진단 및 문제 유형을 도출함.
- 분석된 민간위탁 사무를 바탕으로 문제점 발굴 후 울산시 복구 민간위탁 사무에 적합한 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하였음.

2) 사업 현황

□ 84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시행

- 민간위탁금 예산항목(307-05)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시 복구에서는 14개 과에서 총 84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울산시 복구에서 민간위탁금이 10억원 이상 지출되는 사업은 14개로 전체 민간위탁사업 수의 16.7%를 차지하나 해당 사업의 지출 총액은 600억 5,800만원으로 전체 민간위탁금의 79.6%를 차지하고 있음.

[표 20]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연 번	소관 부서명	위탁사업명	분야	유형	위탁금 (천원)
1	경제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경제일자리	시설	146,241
2	경제일자리과	노동역사관 운영	경제일자리	시설	96,232
3	경제일자리과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경제일자리	사무	30,000
4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문화체육	시설	463,984
5	문화체육과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문화체육	시설	221,358
6	문화체육과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문화체육	시설	200,809
7	문화체육과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문화체육	시설	276,952
8	문화체육과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문화체육	시설	155,885
9	문화체육과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문화체육	시설	200,000
10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송료지원사업	청소환경	사무	312,765
11	농수산과	2024년 해안쓰레기 처리 용역	청소환경	사무	46,000
12	농수산과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청소환경	사무	90,000
13	총무과	북구청 어린이집 운영	보건복지	시설	311,457
14	총무과	가로기 달기 사업 추진	기타행정	사무	24,000
15	주민자치과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36,056
16	주민자치과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51,584
17	주민자치과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76,136
18	주민자치과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54,932
19	주민자치과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51,584
20	주민자치과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37,172
21	주민자치과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37,172
22	주민자치과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43,868
23	복지정책과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기타행정	시설	411,936
24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보건복지	시설	1,575,166
25	노인장애인과	2024년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기능활성화)	보건복지	사무	35,000
2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보건복지	시설	57,300
27	노인장애인과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	시설	96,255

28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보건복지	시설	73,004
29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보건복지	시설	523,440
3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건복지	시설	1,195,722
31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바우처)	보건복지	사무	1,120,835
32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	사무	17,756
33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생활사 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	사무	424,698
34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	사무	7,314,286
3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보건복지	사무	139,878
3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보건복지	사무	575,991
37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	사무	1,005,122
38	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	사무	2,160
39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보건복지	사무	5,714
40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보건복지	사무	1,255,714
41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보건복지	사무	52,003
42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	사무	464,286
43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보건복지	시설	872,740
44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	시설	884,999
45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보건복지	사무	28,132,907
46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보건복지	사무	7,800,000
47	가족정책과	보육료 차액 지원	보건복지	사무	846,300
48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	사무	600,000
49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보건복지	사무	165,980
5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꿈에마루, 몽글몽글 포함)	교육청소년	시설	1,200,059
5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교육청소년	시설	552,159
52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교육청소년	시설	238,640
53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교육청소년	사무	189,438
54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교육청소년	사무	110,654
55	건설과	분노수집운반 업체 지원	청소환경	사무	60,000
56	환경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	시설	630,000

57	자원순환과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청소환경	사무	16,100
58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등 공급대행료	청소환경	사무	113,820
59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청소환경	사무	200,000
60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청소환경	사무	3,048,468
61	자원순환과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청소환경	사무	603,107
62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청소환경	사무	730,689
63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 대행	청소환경	사무	337,701
64	자원순환과	폐형광등, 폐전지, 폐가전 수거 대행	청소환경	사무	127,073
65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청소환경	사무	2,261,064
66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계약	청소환경	사무	1,756,379
67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	청소환경	사무	52,800
68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복지	사무	69,050
69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보건복지	사무	14,620
70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	사무	2,000
71	건강증진과	치매치료비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	사무	64,000
72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복지	사무	220,800
73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	사무	380,000
74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	사무	913,571
75	건강증진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보건복지	사무	2,596
76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보건복지	사무	1,340
77	건강증진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보건복지	사무	1,292
78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	사무	2,014
79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보건복지	시설	1,104,872
80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보건복지	사무	218,551
81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보건복지	사무	14,050
82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복지	시설	1,287,271
83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건복지	시설	198,838
84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건복지	사무	143,132

[표 21]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현황

소관 부서명	위탁사업명	분야	유형	위탁금 (천원)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보건복지	사무	28,132,907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보건복지	사무	7,800,00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	사무	7,314,28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청소환경	사무	3,048,468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청소환경	사무	2,261,064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계약	청소환경	사무	1,756,379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보건복지	시설	1,575,166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복지	시설	1,287,271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보건복지	사무	1,255,71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꿈에마루, 몽글몽글 포함)	교육청소년	시설	1,200,05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건복지	시설	1,195,722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바우처)	보건복지	사무	1,120,835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보건복지	시설	1,104,872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보건복지	사무	1,005,122

3) 세부 분석

(1) 분야별 분석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사업을 문화예술 및 체육, 보건복지, 일자리경제, 교육청소년, 청소환경, 행정일반 등 6가지 분야로 구분.
- 위탁사업 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가 46개(54.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소환경’이 15개(17.9%), ‘기타행정’ 9개(10.7), ‘문화예술체육’ 6개(7.1%), ‘교육청소년’ 5개(6.0%), ‘일자리경제’ 3개(3.6%) 순임.
- 위탁금액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가 608억(80.6%)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환경’(12.9%), ‘교육청소년’(3.0%), ‘문화예술체육’(2.0%), ‘기타행정’(1.1%), ‘일자리경제’(0.4%) 순임.

[표 22] 분야별 민간위탁 현황

분야	위탁사업수		위탁금	
	사업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문화예술체육	6	7.1	1,518,988	2.0
청소환경	15	17.9	9,755,966	12.9
일자리경제	3	3.6	272,473	0.4
보건복지	46	54.8	60,816,710	80.6
교육청소년	5	6.0	2,290,950	3.0
기타행정	9	10.7	824,440	1.1
합계	84	100.0	75,479,527	100.0

(2) 유형별 분석

- 민간위탁 사업의 유형은 시설형 위탁과 사무형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설위탁은 행정재산인 시설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사무수행은 별도의 시설관리 없이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우선권을 두고 비용을 지원받는 위탁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위탁사업 수 기준으로는 사무수행은 51개(60.7%), 시설운영은 33개(39.3%)를 차지하고 있음.
- 위탁금액 기준으로는 사무수행이 621억원(82.3%), 시설운영이 134억원(17.7%)를 차지하고 있음.

[표 23] 유형별 민간위탁 현황

유형	위탁사업수		위탁금	
	사업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사무수행	51	60.7	62,115,704	82.3
시설운영	33	39.3	13,363,823	17.7
합계	84	100.0	75,479,527	100.0

(3) 부서별 분석

- 민간위탁 사업의 소관 부서는 총 14개과임.
- 위탁사업수 기준으로는 노인장애인과 19개(22.6%), 건강증진과 14개(16.7%), 자원순환과 11개(13.1%), 주민자치과 8개(9.5%), 가족정책과 7개(8.3%) 등 순임.
- 위탁사업금액 기준으로는 가족정책과가 393억원으로 52.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159억원(21.1%), 자원순환과 92억원(12.3%) 순임.

[표 24] 부서별 민간위탁사업 현황

소관 부서	위탁사업수		위탁금	
	사업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가족정책과	7	8.3	39,302,926	52.1
노인장애인과	19	22.6	15,934,330	21.1
자원순환과	11	13.1	9,247,201	12.3
건강증진과	14	16.7	4,552,327	6.0
교육청소년과	5	6.0	2,290,950	3.0
문화체육과	6	7.1	1,518,988	2.0
환경위생과	1	1.2	630,000	0.8
농수산과	3	3.6	448,765	0.6
복지정책과	1	1.2	411,936	0.5
주민자치과	8	9.5	388,504	0.5
총무과	2	2.4	335,457	0.4
경제일자리과	3	3.6	272,473	0.4
보건행정과	3	3.6	85,670	0.1
건설과	1	1.2	60,000	0.1
합계	84	100.0	75,479,527	100.0

(4) 위탁 계약기간

- 민간위탁은 사업 내용에 따라 주로 1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타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사업은 ‘해당없음’ 사업 22개를 제외하고 1년 이하가 22개로 35.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3년이 16개(25.8%), 10년 이상 및 연속이 12개(19.4%), 5년이 8개(12.9%)를 차지하고 있음.

- ‘해당없음’ 또는 ‘연속’ 등은 국가가 법령 등에 의해 진행하는 중앙정부 지정사업의 경우이고, 일부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에서 10년 이상 계약 체결 사례가 있음.

[표 25] 계약기간별 민간위탁 현황

위탁계약기간	사업수	비율(%)
1년 이하	22개	35.5
2년~3년 미만	4개	6.5
3년	16개	25.8
5년	8개	12.9
10년 이상 / 연속	12개	19.4
합계	62개	100.0

주 : ‘해당없음’ 사업 22개 제외

(5) 위탁사업 지속기간

- 위탁사업 지속기간은 해당 위탁사업의 최초 위탁계약 시작 연도부터 현재 (2024년 기준)까지의 총 위탁기간을 의미함.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사업 중 ‘해당없음’과 미기재 사업 22개를 제외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업이 22개(35.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년 미만’이 14개(22.6%), ‘5년 이상 10년 미만’ 13개(21.0%), ‘20년 이상’이 7개(11.3%), ‘3년 이상 5년 미만’이 6개(9.7%) 순임.

[표 26] 위탁사업 지속기간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사업수	비율(%)
3년 미만	14	22.6
3년~5년 미만	6	9.7
5년~10년 미만	13	21.0
10년~20년 미만	22	35.5
20년 이상	7	11.3
합계	62	100.0

주 : ‘해당없음’/미기재 사업 22개 제외

- 20년 이상 장기간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26년), ‘분노수집운반 업체 지원’, ‘북구청 어린이집 운영’(각 23년), ‘국가 암 검진비 지원’(22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21년),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노인복지관 운영’(각 20년) 등 8개 사업임.

[표 27] 20년 이상 지속 민간위탁사업 현황

소관 부서	위탁사업명	유형	위탁사업 지속기간
농수산과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무	20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시설	20
경제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시설	21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사무	22
건설과	분노수집운반 업체 지원	사무	23
총무과	북구청 어린이집 운영	시설	23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무	26

(6)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횟수

- 해당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수탁자와 동일한 위탁사업을 재계약한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3개(15.0%), ‘2회~4회’가 10개(50.0%), ‘5회 이상’이 7개(35.0%)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2회 이상 다회 계약이 전체의 85.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8] 현 수탁자와 재계약 횟수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사업수	비율(%)
1회	3	15.0
2회~4회	10	50.0
5회 이상	7	35.0
합계	20	100.0

주 : 해당없음 사업 64개 제외

○ 재계약 횟수가 가장 많은 사업의 수탁자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의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본부’(27회),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의 ‘계명대학교’(17회) 등 국가지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이 둘을 제외하면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의 ‘울산수협’(11회)이 최다회 계약 업체임. 이어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농소3동 주민자치회’, ‘결핵관리사업’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상 각 10회), ‘분뇨수집운반 업체 지원’ 사업의 ‘무룡위생/동해개발/해정그린’(8회),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5회) 등이 뒤를 잇고 있음.

[표 29] 현 수탁자와 2회 이상 재계약 위탁사업 현황

소관 부서	위탁사업명	수탁자(단체)	재계약 횟수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27회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계명대학교	17회
농수산과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울산수협	11회
주민자치과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농소3동 주민자치회	10회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10회
건설과	분뇨수집운반 업체 지원	무룡위생/동해개발/해정그린	8회
경제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5회
주민자치과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농소1동 주민자치회	4회
경제일자리과	노동역사관 운영	노동역사관	3회
주민자치과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동동 주민자치회	3회
주민자치과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효문동 주민자치회	3회
자원순환과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사)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3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람이소중한의원	3회
주민자치과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농소2동 주민자치회	2회
주민자치과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송정동 주민자치회	2회
주민자치과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양정동 주민자치회	2회
주민자치과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염포동 주민자치회	2회

(7) 성과평가

- 민간위탁 수행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에게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수적임.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사업 중 성과평가를 시행한 곳은 33개로 39.3%에 불과함.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곳은 51개(60.7%)인데,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평가 및 감사를 받는 예외적 경우인지, 성과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인지 그 사유를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표 30] 성과평가 시행 여부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사업수	비율(%)
성과평가 시행	33	39.3
성과평가 미시행	51	60.7
합계	84	100.0

[표 31] 성과평가 미시행 위탁사업 현황

소관 부서	위탁사업명	비고
문화체육과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경도2020	'25예정
문화체육과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25예정
농수산과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농수산과	2024년 해안쓰레기 처리 용역	
총무과	가로기 달기 사업 추진	
복지정책과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2024년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기능활성화)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바우처)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 자사업(보조)(생활)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가족정책과	보육료 차액 지원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꿈에마루, 몽글몽글 포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건설과	분노수집운반 업체 지원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자원순환과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계약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건강증진과	치매치료비관리비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8) 계약 방식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과 제한된경쟁입찰로 구분되는데, 통상 민간위탁 조례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지칭함.
- 제한경쟁입찰은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여 그 자격을 갖춘 곳만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도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음.
- 울산시 북구 전체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은 35개(41.7%)이고 ‘협상에의한계약’은 4개(4.8%)임. 해당없는 경우 (타 법령 등의 규정으로 계약방식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국가지정 사업 등)는 45개(53.6%)임. ‘협상에의한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32] 수탁기관 선정 시 계약방식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사업수	비율(%)
공개경쟁입찰	35	41.7
협상에의한계약	4	4.8
해당없음	45	53.6
합계	84	100.0

[표 33]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위탁사업 현황

소관 부서	위탁사업명	수탁자(단체)	위탁금(천원)	수탁자 선정방법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 대행	대영기업	337,701	협상에 의한 계약
자원순환과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사)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16,100	협상에 의한 계약
교육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9,438	지정
농수산과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울산수협	90,000	사무 위탁 계약 체결

(9) 사무편람 유무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기간, 절차, 기준, 서류 및 서식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 중에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49개(58.3%), 사무편람이 없는 곳은 35개(41.7%)임. 사무편람이 없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표 34] 사무편람 유무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사업수	비율(%)
사무편람 유	49	58.3
사무편람 무	35	41.7
합계	84	100.0

[표 35] 사무편람 없는 위탁사업 현황

소관 부서	위탁사업명	비고
경제일자리과	노동역사관 운영	수립중
경제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수립중
농수산과	2024년 해안쓰레기 처리 용역	
노인장애인과	2024년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기능활성화)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바우처)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건설과	분노수집운반 업체 지원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계약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건강증진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0)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여부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할 때, 재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 중에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은 20개로 전체의 23.8%에 불과하고 의회 미동의 사업이 64개로 76.2%를 차지하고 있음. 의회 미동의 사업의 경우,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위임 사무 또는 ‘1년 미만 사업’, ‘반복 사무’ 등 법, 조례상 합리적인 사유를 가진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표 36]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여부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사업수	비율(%)
의회 동의	20	23.8
의회 미동의	64	76.2
합계	84	100.0

[표 37] 의회 미동의 위탁사업 현황

소관 부서	위탁사업명
경제일자리과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문화체육과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농수산과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농수산과	2024년 해안쓰레기 처리 용역
총무과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
주민자치과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과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과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과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과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과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과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과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2024년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기능 활성화)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바우처)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생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가족정책과	보육료 차액 지원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꿈에마루, 몽글몽글 포함)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자원순환과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계약
자원순환과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 대행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등 공급대행료
자원순환과	폐형광등, 폐전지, 폐가전 수거 대행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건강증진과	치매치료비관리비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 위탁사무 점검

1) 점검 의무 및 권한

- (위탁기관의 수탁기관 지휘·감독)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8]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 내 지휘감독 조항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조례에 명시된 권한)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지도 및 감독 의무는 위탁 주체인 구청장에 있지만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울산시 북구의회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의안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함.
- 의회는 민간위탁 승인권, 재위탁 승인권, 재계약 시 상임위를 통해 보고받을 권한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함.

[표 39]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상 의회 권한 조항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4.7.4.>
-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신설 2024.7.4.>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7.4.>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6.]

2) 점검 사항

□ 사전적정성 항목의 점검 사항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서는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사전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

□ 위탁사무 점검 시 유의사항

- 민간위탁 사무를 점검하기 위해 대상 사무를 선정할 이후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위탁사무 추진계획’을 확인해야 함.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해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구성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는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제출되는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사전 검토도 가능함.
 - 제출내용 : 사업계획서(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 또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음.
 - 제출내용 : 인적·물적 현황,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성과평가결과서, 위원회 심의결과.
- 재위탁 동의 및 재계약 보고 과정에서 위·수탁협약서, 성과평가서, 정산서 등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함.
- 위탁 기간이 2년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위탁사무가 시작된 지 1년 이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함.
- 민간위탁 사업이 주민 생활 편의 향상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위탁사무에 대한 대주민 만족도 조사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조사

- 민간위탁 현장 조사는 위탁 주체인 행정, 수탁 주체인 기관 포함.
- 조사의 원칙은 현장 조사 요청-주무부서 면담-수탁기관 점검 순.
- 점검기관별 별도의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구분	필요서류	확인	비고
공통	위·수탁협약서		
	사업(운영)계획서		
	정산(결산)보고서		
	공문(시설설치, 보수, 사업변경 등 주요 내용)		
	현장 점검(사진 포함) 등 실태조사 보고 결과		
	(비품, 물품 등) 관리대장 및 기준		
비용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용역계약서		
	준공내역서		
종사자	종사자 근무명부 및 근무표, 근무일지		
	급여 대장 등 급여 지급 내역		
	계근표(상수계근 등 전산 자료 포함) 등 반입량 확인 자료		
	관리대장(시설물, 비품, 물품)		
	근무규칙		
성과	사업실적 성과보고서		
	이용자 현황 자료		
	운영프로그램 현황		
	설문 조사 결과(설문지 등 일체)		
기타	기타 위 수탁 관련 자료		

☐ 주무부서

구분	점검내용	확인
운영 적정성	해당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수탁기관이 2회 이상의 재위탁인 경우) 장기위탁을 하는 이유?	
	(재위탁인 경우) 재위탁의 횟수, 근거, 절차는?	
비용	이행보증보험 등을 가입하였는가?	
	협약서 등을 공증받았는가?	
	사업비의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지급일시는 어떻게 되는가?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업과 위탁사업비의 비교는 해보았는가?	
	입장료 또는 이용료의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구분	점검내용	확인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 이윤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례	조례에 따라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가?	
	위탁사무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무엇인가?	
	해당 사무의 별도 조례를 제정되어 있는가?	
	해당 사무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가?	
경쟁 확대	(장기위탁인 경우) 다른 수탁기관의 참여 등 경쟁이 불가능한가?	
	위탁업체가 단독입찰하였는가?	
	위탁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참여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참여 확대에 대해 주무부서의 의견은 무엇인가?	
점검 및 감사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현장조사 시 주무부서로 주요 점검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협약서상 보고 및 점검의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사업추진 상황을 현장점검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자치단체 관리시설(물품)의 대장 등은 1식 외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친인척 채용 등 이해관계자의 채용은 확인하고 있는가?	
	상근자의 상근 또는 겸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자체 및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가?	
	위탁사업 일부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한 사례가 있는가?	
	위탁사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점검해 보았는가?	
	결산서 등 정산서류 제출 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성과평가	해당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성과평가 시(수탁기관 제출자료 이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가?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수탁기관

구분	점검내용	확인	
		여	부
운영	수탁받은 주요사무와 기간은 얼마인가?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인수인계 절차는 무엇인가?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 등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가?		
	주요한 이슈나 민원은 무엇인가?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사업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비용	입장료, 이용료 등 이윤의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위탁사업비의 주요 지출(운영,사업,인건비) 구조는 무엇인가?		
	위탁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용자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자 숫자 등을 집계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홍보채널 중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사무편람	조례에 따른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하였는가?		
	사무편람을 담당자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고 확인이 가능한 곳에 비치하고 있는가?		
인건비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임금기준이 존재하고 있는가?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가?		
물품관리	비품 관리 기준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리대장이 있는가?		
	비품의 관리연한 후 폐기 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물품 관리 기준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리대장이 있는가?		
	후원물품이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수탁시설의 관리재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Ⅳ. 민간위탁기관 및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 민간위탁 기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파악
- 민간위탁 운영 현황 평가와 개선 방안 관련 수탁기관 의견 수렴

(2) 조사 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구조화된 설문지 배포 후 수거
- 응답자 : 수탁기관 대표자 또는 민간위탁 업무 책임자
- 조사시기 : 2024년 8월~9월

(3) 조사 내용

- 민간위탁 사업 분야
- 민간위탁 목적
- 운영 재원 조달 현황
- 민간위탁제도 문제점
- 민간위탁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 계약기간에 대한 의견
-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 운영 투명성 방안
- 민간위탁제도 개선 요소
- 민간위탁 대상 확대·축소 의견

(4) 분석 대상

- 총 23개 수탁기관에서 설문지 수거, 이중 유효 설문지 22개를 대상으로 분석

2) 조사 결과

(1) 민간위탁 사업 분야

- 총 22개 응답중 보건·복지가 13개로 59.1%를 차지함. 나머지는 청소·환경 6개(27.3%), 문화·체육 2개(9.1%), 교육·청소년 1개(4.5%)씩 분포함.

[표 40] 민간위탁 사업 분야

구분	응답수	비율(%)
문화·체육	2	9.1
청소·환경	6	27.3
보건·복지	13	59.1
교육·청소년	1	4.5
합계	22	100.0

(2) 민간위탁 수행 목적

- 공공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주된 목적에 대하여 ‘민간 전문지식·기술 활용’이라는 응답이 12개(57.1%)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민간 효율성 활용’이 8개(38.1%), ‘비용·인력 절감’이 1개(4.8%)로 응답함.

[표 41] 민간위탁 수행 목적

구분	응답수	비율(%)
민간 전문지식·기술 활용	12	57.1
민간 효율성 활용	8	38.1
비용·인력 절감	1	4.8
합계	21	100.0

(3) 민간위탁 재원

- 민간위탁금 이외에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하여
법인전입금 8개(36.4%), 공모사업 7개(31.8%), 자체수익금 4개
(18.2%), 울산시북구청의 출자 2개(9.1%) 등으로 응답함.
- 기타 응답으로는 ‘정부/울산광역시/구비 보조’, ‘보육교사인건비 지원금’,
‘금융기관 대출’ 등이 있음.

[표 42] 민간위탁 재원(복수응답)

구분	응답수	비율(%)
자체수익금	4	18.2
기부후원금	3	13.6
공모사업	7	31.8
북구 출자	2	9.1
법인전입금	8	36.4
기타	4	18.2

(4)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 비중

-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 전액’이 7개(38.9%),
‘80% 이상~100% 미만’이 5개(27.8%)로 과반 이상의 기관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을 민간위탁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50% 이상~80% 미만’이 3개(16.7%), ‘20% 이상~50% 미만’이
2개(11.1%), ‘20% 미만’은 1개(5.6%)로 나타남.

[표 43]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 비중

구분	응답수	비율(%)
100%	7	38.9
80-100%미만	5	27.8
50-80%미만	3	16.7
20-50%미만	2	11.1
20% 미만	1	5.6
합계	18	100.0

(5) 법인전입금 비중

-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위탁금의 5% 미만’이 8개 (88.9%)로 매우 적은 수준임.
- 법인전입금이 민간위탁금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에도 응답자의 87.5%인 7개 기관에서 ‘다소 부담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표 44] 법인전입금 비중

구분	응답수	비율(%)
민간위탁금 5% 미만	8	88.9
민간위탁금 10%-20%미만	1	11.1
합계	9	100.0

[표 45] 법인전입금 부담 정도

구분	응답수	비율(%)
다소부담	7	87.5
전혀부담안됨	1	12.5
합계	8	100.0

(6) 민간위탁제도 문제점

-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성과와 효율 중심의 민간위탁 운영체계’라는 응답이 13개(5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족’이 11개(50.0%)로 뒤를 이음.
- 그 밖에 ‘허술한 민간위탁 결정과정’, ‘운영투명성 부족’, ‘예산 비효율과 낭비’,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 부족’, ‘특정 주체의 독점과 신규 주체의 진입장벽’ 등의 의견도 있음. 기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지정한 의견도 있음.

[표 46] 민간위탁제도 문제점(복수응답)

구분	응답수	비율(%)
수탁기관 자율성 부족	11	50.0
운영투명성 부족	1	4.5
성과효율중심	13	59.1
허술한결정과정	2	9.1
예산비효율낭비	1	4.5
주민참여부족	1	4.5
신규진입장벽	1	4.5
기타	4	18.2

(7) 민간위탁 결정 방식 적절성

- 현 민간위탁 결정 방식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11개(50.0%, ‘매우 적절’ 2개, ‘비교적 적절’ 9개)로 응답자의 절반에 이름. ‘보통’은 9개(40.9%)이고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일부 (2개, 9.1%) 있음.
-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불투명·불공정’, ‘평가지표 불합리’, ‘심사위원 전문성 부족’ 등을 들고 있음.

[표 47] 민간위탁 결정 방식 적절성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적절	2	9.1
비교적 적절	9	40.9
보통	9	40.9
다소 부적절	2	9.1
합계	22	100.0

(8) 수탁자 선정 방식 적절성

- 현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11개(50.0%, ‘매우 적절’ 3개, ‘비교적 적절’ 8개)로 응답자의 절반에 이름. ‘보통’은 9개 (40.9%)이고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일부 (2개, 9.1%) 있음.
-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새 주체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 존재’, ‘실효성 있는 심의절차 운영 부족’ 등을 들고 있음.

[표 48] 수탁자 선정 방식 적절성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적절	3	13.6
비교적 적절	8	36.4
보통	9	40.9
다소 부적절	2	9.1
합계	22	100.0

(9) 민간위탁 계약기간 관련 의견

- 현 민간위탁 계약기간에 대하여 짧다는 의견이 13개(61.9%, ‘너무 짧다’ 6개, ‘짧은 편’ 7개)로 수탁기관들은 대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 계약기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8개(38.1%)임.

[표 49] 현 민간위탁 계약기간 관련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너무 짧음	6	28.6
짧은 편	7	33.3
적절	8	38.1
합계	21	100.0

(10) 성과평가제도 적절성

- 현 민간위탁 성과평가제도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은 7개(31.8%, ‘매우 적절’ 1개, ‘비교적 적절’ 6개)임. ‘보통’이 12개(54.5%)로 가장 많고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3개(13.6%)임.
-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수탁사무 특성 미반영’, ‘민관협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 비중 미흡’ 등을 들고 있음.

[표 50] 성과평가제도 적절성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적절	1	4.5
비교적 적절	6	27.3
보통	12	54.5
다소 부적절	3	13.6
합계	22	100.0

(11)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강화’와 ‘주민, 이용자 참여 확대’가 각각 5개(22.7%)임. 그 외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외부 독립적 기관의 회계감사’가 각각 1개씩임.
- ‘현 운영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10개(45.5%)에 이름.

[표 51]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구분	응답수	비율(%)
정보공개 강화	5	22.7
주민참여 확대	5	22.7
신고센터 운영	1	4.5
외부 회계감사	1	4.5
현재방식 충분	10	45.5
합계	22	100.0

(12) 민간위탁제도 개선 방향

- 민간위탁제도 전반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요소에 대하여는 ‘수탁 기관 자율성 강화’가 10개(45.5%)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종사자 권리보호’ 5개(22.7%), ‘사회적 가치 실현’ 4개(18.2%), ‘운영투명성 강화’ 2개(9.1%), ‘장기위탁관행 개선’ 1개(4.5%) 순임.

[표 52] 민간위탁제도 개선 방향

구분	응답수	비율(%)
수탁기관 자율성 강화	10	45.5
운영 투명성 강화	2	9.1
장기위탁관행 개선	1	4.5
종사자 권리보호	5	22.7
사회적가치 실현	4	18.2
합계	22	100.0

(13) 민간위탁 대상 확대·축소 의견

- 현 민간위탁 대상의 확대·축소에 대하여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3개(59.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현행 유지’는 6개(27.3%), ‘축소해야 한다’는 3개(13.6%)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53] 민간위탁 대상 확대/축소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확대	13	59.1
축소	3	13.6
유지	6	27.3
합계	22	100.0

3) 민간위탁 수탁기관 설문조사 요약

(1) 민간위탁 목적 및 재원

- 민간위탁의 주목적에 대해서 수탁기관들은 ‘민간 전문지식·기술 활용’과 ‘민간 효율성 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수탁기관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민간위탁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지만 법인전입금, 공모사업, 자체수익금 등을 보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법인전입금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재원조달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민간위탁 평가

-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수탁기관의 대부분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운영’과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족’을 들고 있음.
- 민간위탁 결정과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보통’ 등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음.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이나, 결정과정 불투명과 불공정, 평가지표 불합리, 심사위원 전문성 부족, 새 주체 진입장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민간위탁 성과평가제도에 대하여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나 ‘수탁사무 특성 미반영’, ‘민관협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 비중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음.
- 위탁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짧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3) 민간위탁 개선 방안

- 민간위탁제도 개선 방향으로 ‘수탁기관 자율성 강화’-‘종사자 권리보호’ - ‘사회적 가치 실현’- ‘운영투명성 강화’-‘장기위탁관행 개선’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

-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은 현재 충분하다는 입장이 다수이나, ‘정보공개 강화’와 ‘주민, 이용자 참여 확대’ 등을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 민간위탁 대상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민간위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설 이용 평가
- 민간위탁 개선 방안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2)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 온라인 앱 주소 및 QR코드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응답자 :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 조사시기 : 2024년 8월~9월

(3) 조사 내용

- 개인 특성 : 성별, 연령대
- 이용 교통수단
- 이용 빈도
- 분야별 만족도 : 직원 친절도, 직원 전문성, 프로그램, 주민요구 충족도, 편리성 등
- 민간위탁 개선 방안

(4) 분석 대상

- 유효 온라인 설문 392개를 대상으로 분석

(5) 응답자 이용 민간위탁 기관

- 감성갯도2020, 송정복합문화센터, 울산북구장애인인권센터, 오토밸리 문화센터,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기타기관 등

2)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 총 유효 응답자 392명 가운데 남성이 20.9%, 여성이 79.1%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8.2%, 20대 5.1%, 30대 11.0%, 40대 33.7%, 50대 23.2%, 60대 이상 18.9%로 구성됨.

[표 54] 민간위탁기관 이용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수	비율(%)
전체		392	100.0
성별	남성	82	20.9
	여성	310	79.1
연령별	20세 미만	32	8.2
	20대	20	5.1
	30대	43	11.0
	40대	132	33.7
	50대	91	23.2
	60세 이상	74	18.9

(2) 이용 교통수단

- 민간위탁 시설 이용시 활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73.1%로 압도적임. 그 다음으로 ‘도보’(13.6%), ‘버스’(9.7%) 등 순임.
- 성별로는 남성은 ‘자가용’(51.2%) - ‘도보’(32.9%) - ‘버스’(12.2%) 순이고, 여성은 ‘자가용’(79.0%) - ‘버스’(9.1%) - ‘도보’(8.4%) 순임.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자가용’(50.5%) - ‘도보’(29.5%) - ‘버스’(12.6%) 순이고, 40대는 ‘자가용’(87.1%) - ‘도보’(7.6%) - ‘버스’(3.8%), 50대는 ‘자가용’(81.3%) - ‘버스’(11.0%) - ‘도보’(5.5%), 60대 이상은 ‘자가용’(67.1%) - ‘버스’(14.1%) - ‘도보’(13.7%) 순임.

[표 55] 이용 교통수단

		도보	버스	지하철	자전거	택시	자가용	기타
전체		13.6	9.7	0.3	0.3	1.0	73.1	2.0
성별	남성	32.9	12.2	1.2	1.2	0.0	51.2	1.2
	여성	8.4	9.1	0.0	0.0	1.3	79.0	2.3
연령별	30대이하	29.5	12.6	0.0	1.1	1.1	50.5	5.3
	40대	7.6	3.8	0.0	0.0	1.5	87.1	0.0
	50대	5.5	11.0	0.0	0.0	1.1	81.3	1.1
	60세이상	13.7	15.1	1.4	0.0	0.0	67.1	2.7

(3) 시설 이용 빈도

- 최근 한 달 동안 시설 이용 빈도는 ‘한달에 1~2번’이 40.2%로 가장 많았고, ‘1주에 1~2번’(24.5%), ‘거의 매일’(11.9%) 순임.
- 성별로는 남성은 ‘거의 매일’(32.1%) - ‘한달에 1~2번’(28.4%) - ‘1주에 1~2번’(17.3%) 순이었고, 여성은 ‘한달에 1~2번’(43.3%) - ‘1주에 1~2번’(26.4%) 순임.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거의 매일’(34.7%) - ‘한달에 1~2번’(27.4%) 순이었고, 40대는 ‘한달에 1~2번’(47.0%) - ‘1주에 1~2번’(24.2%), 50대 이상도 ‘한달에 1~2번’(40%대), ‘1주에 1~2번’(20~30%대) 순임.

[표 56] 시설 이용 빈도

구분		거의 매일	1주에 1~2번	보름에 1~2번	한달에 1~2번	첫번째 이용
전체		11.9	24.5	7.0	40.2	16.5
성별	남성	32.1	17.3	7.4	28.4	14.8
	여성	6.5	26.4	6.8	43.3	16.9
연령별	30대이하	34.7	15.8	8.4	27.4	13.7
	40대	4.5	24.2	8.3	47.0	15.9
	50대	3.4	23.6	4.5	43.8	24.7
	60세이상	5.6	37.5	5.6	40.3	11.1

(4) 분야별 시설 이용 만족도

- 민간위탁 시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분야별 만족율(‘매우 만족’+‘약간 만족’ 비율)은 ‘직원친절도’(97.4%) - ‘직원 전문성’(97.4%) - ‘프로그램’(96.4%) - ‘주민요구 충족도’(95.4%) - ‘편리성’(95.1%)로 전 분야에서 95% 이상을 나타냈음.

[표 57] 분야별 만족율

분야	직원 친절도	직원 전문성	프로 그램	주민요구 충족도	편리성
만족율 (매우만족+약간만족)	97.4	97.4	96.4	95.4	95.1

- 민간위탁 시설 이용 만족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만족도 설문에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만을 뽑아보면, ‘직원 친절도’(91.3%) - ‘직원 전문성’(88.3%) - ‘프로그램’(88.0%) - ‘주민요구충족’(82.6%) - ‘편리성’(76.7%)로 나타나 분야별로 상대적 만족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별로는 전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음.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상대적 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적 만족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표 58] 분야별/속성별 ‘매우만족’ 비율

구분		직원 친절도	직원 전문성	프로 그램	주민요구 충족	편리성
전체		91.3	88.3	88.0	82.6	76.7
성별	남성	93.8	89.0	89.0	82.9	79.3
	여성	90.6	88.1	87.7	82.5	76.1
연령별	30대이하	96.8	95.8	95.8	90.5	86.3
	40대	92.4	90.2	93.1	86.3	80.2
	50대	86.8	84.6	84.6	80.2	71.4
	60세이상	87.8	79.7	73.0	68.9	64.9

(5) 민간위탁 시설 개선 필요 사항

- 민간위탁 시설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시설 및 환경 개선’이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선’(18.1%), ‘운영 개선’(9.5%) 순임.
- 기타 의견도 37.9%로 많았는데, 주로 교통 및 접근성, 주차장 개선 등과 장애인 및 장애아동 편의시설 등을 지적함.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시설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았으나, 남성은 ‘운영 개선’(11.5%), 여성은 ‘프로그램 개선’(20.6%)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나이가 젊을수록 기타 요구(교통 및 주차 관련)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표 59] 민간위탁 시설 개선 필요 사항

구분		운영 개선	서비스 수준 개선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개선	기타
전체		9.5	3.3	31.2	18.1	37.9
성별	남성	11.5	3.8	33.3	9.0	42.3
	여성	8.9	3.2	30.6	20.6	36.7
연령별	30대이하	9.4	3.5	17.6	14.1	55.3
	40대	8.6	1.6	29.7	20.3	39.8
	50대	13.4	3.7	36.6	15.9	30.5
	60세이상	6.3	6.3	45.3	21.9	20.3

3) 조사 결과 요약

(1) 이용 실태

- 민간위탁 시설 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상대적으로 남성, 30대 이하 등은 도보의 비중도 높은 편임.
- 민간위탁 시설 이용 빈도는 ‘한달에 1~2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성, 30대 이하의 경우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이름.

(2) 시설 이용 만족도

- 민간위탁 시설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분야별로는 직원 친절도 > 직원 전문성 > 프로그램 > 주민요구충족 > 편리성 순으로 상대적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3) 개선 필요 사항

- 민간위탁 시설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시설 및 환경 개선’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개선’, ‘운영 개선’이 뒤를 이음. ‘교통 및 접근성’, ‘주차장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의견도 다수 제기됨.

Ⅳ. 민간위탁 개선방안

1. 성과평가 강화

1) 성과평가의 중요성

□ 성과평가의 중요성

- 그동안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민간위탁사무 대상 업무 및 기관 선정의 문제점,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비적절성, 위탁 업무 관리·감독 부실 등 민간위탁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문제점들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박성애·이령 2022, 112).
- 많은 지방정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실정임(강병준·윤건·윤민석 2015).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지휘 감독 결과, 감사 결과와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울산시 북구의 민간위탁 실태 조사 결과, 84개의 사업 중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33개로 39.3%에 불과함. 나머지 51개(60.7%)는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위탁제 도입의 취지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울산시 복구 현황

□ 울산시 복구 성과평가 관련 제도

- 울산시 복구 민간위탁 조례²⁾는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성과평가)

-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지휘·감독 결과 및 감사결과와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재계약 절차에 명시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재계약)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재 조례에 근거,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성과평가)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으로 약칭한다.

○ 이와 같이 울산시 북구는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구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지표 관리 시스템이 부재함.

- 향후 위·수탁 계약 시 주관부서에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지표를 확정하는 등 평가내용과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한 평가 계획을 세운 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 점수와 평가 등급만 공개되어 있어, 성과평가 결과 공개 본연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표 60] 울산시 북구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	수탁기관	위탁기간	평가점수	평가등급
○○○○○	○○○○○	2022. 1. 1. ~ 2024. 12. 31. (3년)	91점	탁월

출처: 울산시 북구청 홈페이지

3) 개선방안

가. 민간위탁 성과 지표를 통한 체계적 성과 관리

□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의 필요성

○ 많은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에서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평가행위로서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무가 적절하게 시행되는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민간위탁 운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정창수·김민수·김유리 2023).

- 그러나 울산시 북구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부재하고, 구 차원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으며 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성과평가 결과 공고문에도 평가 점수 및 평가 등급만 공개하고 있음.
- 민간위탁 기관마다 별도의 평가지표를 갖추는 것은 개별 민간위탁기관 사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지만, 개별 수탁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특성만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 사업이 추구하는 일반적 목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평가가 간과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를 크게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 수탁기관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는 개별분야의 지표, 주민(이용자)만족도로 체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 성과평가 지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성과평가 지표의 설정은 매우 중요함. 성과지표는 측정산식의 투명성 및 자료의 연계, 목표와의 연계성, 반복 측정 시 동일 결과 도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정창수·김민수·김유리 2023).
- 공통분야에는 민간위탁사업의 일반적인 사무 목표 달성과 관련한 지표인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등의 지표가 포함되고, 개별분야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등이 포함.
- 그 밖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각 평가 지표의 정의와 핵심 평가 요소, 측정 항목 및 근거 자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61] 서울시 강서구 종합성과평가 지표

부문	차원	평가 지표	세부지표	유형	배점
공 통 분 야	사업운영 비전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 기관의 미션과 비전 ② 운영계획서의 적절성·적합성	정량 정량	5
	재정운영 효율성	비용절감 효과	① 직접수행 대비 비용절감 효과 ② 재정 자립도(건전성) ③ 외부지원금 확보	정량 정량 정량	10
			① 회계의 투명성 ② 운영비·인건비 증감 실적 ③ 차부담 비율 및 이행	정량 정량 정량	
		재정운영 실적	① 인력운용 적정성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비율) ② 정규직 비율 증가율, 비정규직 비율 감소율, 이직률, 고용승계·유지 ③ 전문 자격증 소지 비율 ④ 기술향상 및 교육 활동	정량 정량 정량 정량	
			① 고용조건 및 과정의 공정성 ② 인사 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 ③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④ 근무환경 안전대책 마련 ⑤ 안전사고 발생 건수 ⑥ 근무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정성 정성 정량 정량 정량 설문 조사	
			① 취약계층 고용률 ② 지역사회 공헌 ③ 지역주민 참여	정량 정성 정성	
	사회적 가치	정보공개	① 홈페이지 운영 ② 정보공개(예산, 고용 등) ③ 개인정보 보안관리	정량 정량 정성	10
			① 민원발생 건수 및 해결률 ② 주민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정량 설문 조사	
	사용자 만족도	주민 만족도	① 사업계획서 전문성 ② 사업 목표 달성률 - 1년차/2년차/3년차 사업달성률	정성 정량	30
	시설관리	시설관리 적정성	①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②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마련 ③ 시설 운영·관리의 적절성 ④ 시설관리계획 이행실적 ⑤ 시설 가동율·중단일수 기타	정성 정성 정성 정량 정량	10
			①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노력 ② 지도점검 이행 노력	정성 정량	
개 별 분 야	개선노력	서비스 개선			10

출처:강서구 민간위탁관리지침(2022).

-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통분야, 개별분야, 사용자 만족도 평가 외에 감점 지표, 가점 지표를 두는 경우도 있음. 가점 지표에는 수상실적 등 외부의 긍정적 평가 실적, 조직진단 또는 컨설팅 실적 여부 등이 있으며, 감점지표에는 임금 체불 등 협약위반, 수탁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위 등이 포함.
- 최근 서울시는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 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을 신설하고, 가산점을 적용해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힘.³⁾

[표 62] 서울시 종합성과평가 중 감점 지표

세부평가요소		시민 이용 시설형	기반 시설형	사무형	중간 지원 조직형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2.00	-2.00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2.00	-2.00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2.00	-2.00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취득		-2.00	-2.00	-2.00	-2.00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2.00	-2.00
수탁기관 필수교육 (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2.00	-2.0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2.00	-2.0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4.00	-4.00
감사 및 시정 주요사업평가 처분요구	징계, 문책, 시정	-2.00	-2.00	-2.00	-2.00
	주의(경고, 훈계)	-1.00	-1.00	-1.00	-1.00
	개선요구, 고발·수사요청	-0.50	-0.50	-0.50	-0.50
	권고, 통보, 현지조치	-0.10	-0.10	-0.10	-0.10

출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

3) 출처:<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67>

[표 63] 완주군 종합성과평가 지표 중 감점 지표

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① 계약내용 위반	-20	-5
② 위탁사무 지연·불성실한 사무처리		-5
③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5
④ 부적절한 내용의 민원 또는 언론보도 발생		-5

출처: 전라북도 완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

- 성과 평가 지표에는 세부 평가요소와 더불어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 구리시는 평가지표에서 자료수집 및 평가 방법에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자료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64] 경기도 구리시 성과지표

구분	항목	평가지표 내용	지표 성격	자료수집 및 평가방법
공 통 지 표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운영방식 대비 예산절감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활용 분야 비용 분석 - 시설장비 관리(장비 가동률) 등 - 예산절감 개선 노력 	정량	세출예산내역서, 원가계산비교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정별 재원·자원 투입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사례 - 인력운용·사업추진 계획수립 여부 - 특화사업 운영 실적 - 예산집행·회계관리 (정산결과, 회계감사 결과 반영 조치실적) 	정량/ 정성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운영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인력투입 대비 최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예산대비 사업비 비율 - 직원 1인당 수혜자(이용자) 증가율 등 - 인력의 전문성 확보율 	정량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인력 비교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실적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 달성정도 등 - 업무개선 추진실적 - 대민서비스(시행사무)의 개선 추진 실적 	정량/ 정성	전년도의 총 위탁비용 대비 실적 증가율

구분	항목	평가지표 내용	지표 성격	자료수집 및 평가방법
고유사업지표	수혜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점수 ■ 민원발생 건수 ■ 민원처리 절차 이행, 세부 처리지침 마련 	정량	만족도조사 결과
	공공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제공, 시설개방 등 실적 ■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실적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재 활용 실적 - 소외계층 배려 프로그램 운영 - 대외 봉사활동 실적 	정량/ 정성	각 개별 위탁사업에 맞게 구성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최소자격수준 준수율 ■ 수탁기관 관련업무 실적 ■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관리대응계획 	정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사업의 실적평가서 반영 등 ■ 기타 정량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항목 평가 	정성	

출처: 구리시청 홈페이지

□ 민간위탁 유형별 성과관리

- 통상 민간위탁사업 유형화는 첫째, ‘효율성 추구 단순서비스’ 대 ‘효율성 추구 전문서비스’, 둘째, 효율성과 공공성 중 중시하는 가치, 셋째, 민간 위탁 사무의 목적 및 특성(예산지원형, 중간지원형, 수익창출형), 넷째, 기타 업무 성격 내지 계약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이정석·박충훈 2020).
- 서울시는 위탁사무 평가를 할 때 위탁사무 평가유형을 시민이용시설형(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형(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관리·운영 : 버스공영차고지), 사무형(시설의 운영이 아닌 일반 사무: 기금관리 등), 중간지원조직형(행정과 민간의 중재자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성과평가 지표에서도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세부평가요소 및 배점을 달리하고 있음. 공통분야 세부평가요소 중 의사소통 노력,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평가항목은 중간지원조직형인 경우에만 포함되고, 시민이용시설형, 기반시설형, 사무형 등 다른 유형에서는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65] 서울시 유형별 종합성과평가 지표 (2023)

평가 영역	평가 범주	평가 지표	세부평가요소	시민 이용 사실형	기반 사실형	사무형	중간 지원 조직형
공통 사무	사업 인프라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50	2.50	2.50	2.50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2.50	2.50	2.50
			의사소통 노력도	—	—	—	2.00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3.00	3.00	3.00	3.00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2.00	2.00	2.00
		사회적 가치 기여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노력	7.00	7.00	7.00	7.00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2.50	2.50	2.50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2.50	2.50	2.50
	사업 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2.50	4.00	2.50	2.50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00	3.00	—	—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1.00	2.50	1.50	1.00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0	2.50	2.00	1.00
			정책준수 노력도	3.00	3.00	3.00	3.00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3.00	6.00	2.50	3.00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0	6.00	3.00	—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	2.50	2.50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	—	—	2.50
개별 사무	사업 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45	45	45	45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3.00	3.00	3.00	3.00
	지도점검 이행노력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물		3.00	3.00	3.00	3.00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		2.00	2.00	2.00	2.00
사용자 만족도	만족도 제고 노력	시민 만족도 조사		10.00	—	10.00	10.00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5.00	5.00

출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

-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체육관, 문화센터 등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이거나, 재이용률 등을 주요 가중 성과 지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센터, 외국인 인권센터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 업무라는 고유한 사무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 항목을 포함하고, 가중치를 둘 수 있음. 또한, 청소행정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복지(휴식공간 확보, 활용실태)와 안전(안전용품 지급 횟수 및 사고율), 인당 처리율 등을 주요 가중 지표로 삼을 수 있음.
- 이에 울산시 복구는 위탁 유형과 위탁 분야에 따라 지표를 개발, 성과평과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민간위탁 사무의 구분을 참고하여 ‘보건복지’, ‘청소환경’, ‘경제일자리’, ‘문화체육’, ‘교육 청소년’, ‘기타행정’ 등으로 구분하고 각 사무 유형별 지표에 시설운영, 사무수행 등 위탁 유형을 구분하고, 각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유형은 크게 시설형 위탁(울산시 복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 위탁), 사무형 위탁(시설의 운영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 자립형(구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같은 민간위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기능, 규모, 이용자 범위, 개방 일수 등 다른 점이 많다는 점 등 기능 중심의 공통지표와 더불어 영역별 지표가 필요함(김문연 2021).
- 현재 울산시 복구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부재한 상태임. 이후 민간위탁에 관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방법, 평가지표를 관리지침에 명시하고, 나아가 조례에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성과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

□ 충실한 성과평가 결과 공개

○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 지표에 따라 충실하게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바처럼 현재 울산시 북구의 성과평가 결과는 평가 점수와 등급만 공개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66] 2024년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공고 현황

위탁사무	평가점수	평가등급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93.5	탁월
북구예술창작소소금나루2014 운영	94.0	탁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94.0	탁월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82.0	우수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95.0	탁월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97.1	탁월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90.5	우수

출처: 울산시 북구청 홈페이지

－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결과,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을 비롯하여 해당 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의견을 공개하고 있으며, 평가자 지위 및 이름도 공개하고 있음.

－ 이에 울산시 북구에서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신청 선정심의기준표와 자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를 공개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67] 000 전통시장 성과평가 결과서

분야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의견
비전/ 전략개발 (5점)	기관의 미션과 비전	2	2	남부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을 효율적으로운영하고 있음
	운영계획서의 적절성·적합성	3	2	전통시장 이용 고객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조직/ 인력운영 (20점)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5	3	당초 고객지원센터는 전통시장 매니저가 건물에 상주하면서 관리하였고, 고객주차장은 시장측에서 채용한 관리자가 있었으나, 최근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에 따라 고객주차장 관리인력이 없음
	조직운영 실적 -총회, 회의 등 조직활동 내역	5	4	매달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안에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하였음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적정임금 보장, 적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휴일 및 연차휴가 보장, 적정 직원 충원율, 직원 이직율, 근로자의 직무만족	5	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채용한 '전통시장매니저'가 고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높은 편임
	상시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선발 과정의 공정성	5	5	상시근로자는 면접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였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음
재무/ 예산관리 (10점)	회계의 투명성	3	3	분기별 지도, 점검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재정의 건전성	3	3	고객지원센터는 수익 발생 시설이 아니므로 상인회 자체 회비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나, 고객주차장은 꾸준한 고객유치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해당 수입금을 바탕으로 전통시장내 시설보수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외부 지원금 확보	4	4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시설물 보수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함
고객 프로그램/ 서비스 (60점)	시설물의 고객 개방	15	15	공중화장실, 고객쉼터 및 고객주차장을 상시개방하여 운영시간동안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고객을 위한 행사 개최	15	13	명절 이벤트 및 주기적인 고객 행사를 개최 하고 있음
	이용자의 안전 제고	15	15	주기적인 시설 안전물 점검을 실시
	지역사회 교류 및 후원	15	10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을 통한 시장인근 경로당, 어린이집과 함께 시장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해당시설에 쿠폰지급 함
시설관리 (5점)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2	2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쉼터와 공중화장실 위생상태가 매우 양호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마련	2	2	시장 상인회에 화재 비상연락망을 잘 갖추고 있고,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함
	시설 운영·관리의 적절성	1	1	전반적으로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 시설 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
계		100	89	-

잘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지원센터는 작은 규모이지만 시장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하였음 - 고객주차장에서 발생된 수입을 시장환경개선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음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협소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시장 자체 행사가 없음 - 최근 고객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교체에 따른 별도 관리 인력이 없어 주차장 주변환경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시설 규모와 인력을 활용해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만족하고 지역사회와 적극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설 활용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 - 주차장 주변 환경 정리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 채용 강구

출처: 서울시 강서구청 홈페이지

□ 성과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제16조),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제17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행안부의 민간위탁 실태 전수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해 개선에 반영하는 비율은 47.4%, 재계약에 반영하는 비율은 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⁴⁾

- 이에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거나, 성과평가 활용 정도를 성과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충북 진천군 등에서 매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4) “정부사무 민간위탁 곳곳 ‘구멍’ . . . ” (뉴시스, 2023.02.19.)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운영성과평가)

-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위탁사무의 성과평가)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를 매년1회 정기평가와 위탁기한종료 3개월전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고객만족도, 계약내용 이행수준, 회계처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성과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심사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센티브·패널티 시스템

○ 현재 민간위탁 사업은 규제 중심의 관리 감독에 치중하여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한되고 있어 탁월한 공공서비스 역량을 구비한 수탁기관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수탁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이 비용절감과 서비스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짐(김덕준·임정빈 2023, 123).

－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과평가결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인센티브·패널티 시스템의 기대효과

－ 인센티브와 패널티 시스템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사업시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개선 결과나 특정한 세부 목표 달성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차후 유사한 사무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수탁기관은 민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외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위탁 사업의 목표 달성뿐 아니라 민간의 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

○ 인센티브·페널티 방안

- 서울시는 시설형위탁의 경우,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도서관, 유치원, 복지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적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지정관리자제도에서 이용요금 설정 권한 및 부대사업 권한 부여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권경선 2021).
- 인센티브 방안은 위에 제시된 재계약이나 재위탁 선정 시 가점 부여, 수익금 배분 등의 금전적 보상, 수탁기관의 권한 강화 외에도 법인전입금 부담 폐지, 수탁기관의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 표창, 우수기관 인증,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지원 등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
- 페널티 방안으로는 위탁비용감액 및 환수, 과태료 부과, 민간위탁 참여 기회 제한 등을 들 수 있음.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에 관한 내용은 위수탁협약서와 사무관리지침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 전남 무안군, 서울시 광진구 등에서는 조례에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전라남도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5조(성과평가)

-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와 재위탁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에 완료하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다.
- ⑤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인센티브 및 패널티)

- ① 구청장은 제 2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비용보전 및 연장계약(이하 “인센티브”라 한다.) 또는 위탁계약 해지·감액(이하 “패널티”라 한다.)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다.
 1. 위탁비용보전 (금전적 보상)
 2. 연장계약
 3. 우수기관 표창 및 홍보
 4. 국내·외 연수 등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패널티로 부여할 수 있다.
 1. 위탁비용감액 및 환수
 2. 차기 입찰 참여기회 제한
- ④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기준 및 방안은 협약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다.

다. 수탁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민간위탁 성과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민과 관이 서로의 필요로 인해 협력하고, 사회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함(정창기·이규홍·김현수 2020, 117-118).

－ 이런 점에서 수탁기관과의 신뢰와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수탁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평가지표 설정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 현 민간위탁 평가제도는 행정관청이 관리와 감독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평가지표, 평가방법, 성과목표 등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민간위탁의 본질적 목적과 무관한 행정절차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음(이준영·이정용 2021, 11).
- 또한, 규제와 감시에 편향되어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수탁기관 간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에서 사업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평가지표 개발에 사업 실무자의 참여와 서비스 이용자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평가 체계 필요(마포구의회 2021).
-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에 사업목표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성과평가 지표, 평가방법 등을 협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여 수탁기관이 을(乙)의 지위에서 형식적인 목표 달성에 매몰되지 않고, 민간위탁 사무의 실질적인 목적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서울시의 성과지표 컨설팅 사례처럼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담당관에서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의 경우 지표 컨설팅을 실시, 그 결과를 위탁 주관부서와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있음.
- 성과지표 컨설팅을 통해 위·수탁 기관은 사업 목표 및 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과 운영 방침에 관한 이해와 합의의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

라.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 그동안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 대한 낮은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었음. 그 원인으로는 수많은 평가 주체와 그로 인한 평가의 낮은 통합성, 평가 주체의 비전문성과 평가대상에 의한 포획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음(강병준·윤건·윤민석 2015, 247).
- 이에 평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주체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현행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민간위탁 평가전담기관 혹은 민간위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평가와 성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 궁극적으로 민간위탁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위탁 관행 개선

1) 장기위탁문제 개선의 필요성

□ 장기위탁의 문제점

- 하나의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한 수탁자의 부족으로 인해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서 지역 내 다수의 위탁사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운영. 이런 장기위탁 관행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소수의 수탁기관이 다수의 위탁사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수탁업체에 효율성 향상 및 경영개선을 요구하기는 커녕 위탁사업 평가와 책임 범위까지 모호해지는 등 위탁자인 행정기관이 을(乙)의 위치에서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정창수·신희진·김민수 2023).
- 동일한 수탁기관의 재위탁과 관행적인 장기계약 문제는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외에 새로운 민간주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

□ 재계약·재위탁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 지자체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잦은 법인 교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을 보장하고 있음.
- 법령에 재계약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재계약을 1회로 한정하나, 대부분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

-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재계약 및 재위탁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 운영.
- 울산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재위탁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재계약 및 재위탁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울산시 중구는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정의만 있으며, 장기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2) 울산시 복구 현황

□ 울산시 복구의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정책 및 현황

- 울산시 복구는 2024년 7월 4일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사무의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해 장기위탁 관행을 제한하고자 했음.
- 그러나, 울산시 복구의 민간위탁 지속기간,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횟수를 분석한 결과, 많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장기계약 관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울산시 복구 민간위탁 위탁사업 지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사업은 22개(35.5%), ‘20년 이상’사업은 7개(11.3%)로 10년 이상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경우가 전체의 4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재계약을 했다고 응답한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현재 수탁자와 동일한 위탁 사업을 2회 이상 재계약한 다회 재계약 사업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가. 재위탁·재계약 시 구의회 역할 강화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역할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전에 의회동의
를 받도록 규정.

-의회는 승인과정이나 선정심의 과정에서 첫째, 법령 및 조례에서 구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둘째, 해당 사무 위탁의 근거 법령이 명확한지, 셋째,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한 사무인지, 즉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구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넷째, 직영과의 비교 분석, 즉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및 서비스 향상 효과,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해 충분히 심의되었는지 등의 적정성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함.

[표 68]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분석 기준

분석기준		분석내용
공공성	서비스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수혜대상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주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서비스 중단 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 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관리 운영의 투명성	관리 감독의 용이성과 효율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외에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구의회 보고 규정 등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울산시 복구 조례에서 규정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역할

- 울산시 복구 민간위탁 조례는 승인 및 동의 조항(제4조의3)을 별도로 두고 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재위탁, 중요 사항 변경 및 위탁운영상 사고가 일어난 경우 등에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단, 재계약을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

□ 재위탁·재계약 시 구의회의 역할 강화

- 재계약 시 의회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
 -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울산시 복구는 재계약의 경우 의회의 역할은 취약한 편임. 향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뿐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가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민간위탁이 관행적으로 장기화되거나 만연한 행태를 개선할 필요 있음.
 - 이에 재계약을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재계약 시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선정위원회 심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재계약 추진 사유에 대한 엄격한 검토 필요.
 - 전북 완주군 등에서는 조례에 재계약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제19조(재계약)

- ① 군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24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재위탁·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서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의회 제출

－ 현행 조례에서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 최근 수탁기간 동안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 점검, 감사에 따른 결과와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 제출 의무는 없음.

－ 이에 재위탁·재계약을 심사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충실한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재위탁·재계약 제도 개선

○ 울산시 북구는 많은 지자체가 법령에 재계약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달리 조례에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양한 법령에 따른 예외 허용 사유로 인해 장기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재계약 기간 만료 후 추가 위탁 연장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에 문호를 개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재계약)

① 군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세종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시 재계약 회수 제한 조항과 더불어 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위탁을 진행하도록 조례에 명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 계약기간)

② 재위탁은 한차례만 가능하며, 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심사 강화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한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원칙은 공개모집이나, 예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민간위탁 현장에서는 행정의 편의성이나 특정 수탁기관에 대한 종속성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적되기도 함.
- 이에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수의계약 심의가 필요함.

다.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 민간위탁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면,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되는 경향을 띤.
- 이에 울산시 북구에서도 장기위탁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위탁 조례에 일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몰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이전에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게 되고, 나아가 한번 위탁을 받으면 장기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민간위탁 일몰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사례로 충청남도를 꼽을 수 있음. 충청남도는 2019년 민간위탁 시행규칙을 개정, 3회 위탁이 종료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 민간위탁사무를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신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일몰제 적용)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3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3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일몰제는 단년도 사업을 제외한 최소 3년 이상 지속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일몰 평가 항목인 평가종합(30점), 사업타당성(25점), 사업관리 적정성(15점), 사업성과 달성도(30점)를 참고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사업 중단, 사업수행 방법 변경, 단계적 축소,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현재 울산시 북구 장기위탁 사유를 보면 민간위탁이 아닌 용역, 대행 등 유사 사업 방식 사유도 있으며, 보조사업이나 공공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적정한 사업도 있는 등 민간위탁 사무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원천적 검토가 필요.
-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민간위탁 적정 여부 재검토 판단 기준은 시사하는 바가 많음.

[표 69] 서울시 민간위탁 적정 여부 원점 재검토 판단 기준

단계	판단기준	분석	분석결과
1	•시장의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인가?	민간활동지원 → 보조 사업 시장의 사무 → ②번 검토	보조 사업
2	•민간의 사적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인가? •행정기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 것인가?	사적재공급허가 → 사용수익허가 공공재공급 → ③번 검토	사용 수익 허가
3	•민간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무인가?	No → 용역 Yes → ④번 검토	용역
4	•서비스 공급 과정의 본질적 사무인가? 부수적인 사무인가	부수적 사무 → 용역 본질적 사무 → ⑤번 검토	용역
5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 되는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가?	수탁기관 귀속 → ⑥번 검토 행정기관 귀속 → 대행	대행
6	•투출기관이 지속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무인지? •관계 법령상 투출기관 고유사무로 규정되었는지? •투출기관이 사무수행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Yes → 고유사무 / 공공위탁 No → 민간위탁	고유 사무 공공 위탁

출처: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서울시 2017)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3)에서는 연속적인 지방보조사업 대상으로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도 중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그 밖에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일몰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있음.

- 전북의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전주시, 정읍시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통해 목적 달성, 성과 미흡, 주민 불편 증대,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방지,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있음.
- 이처럼 별도의 시책일몰제 조례와 같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 예산 및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일몰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사업 중단, 사업수행 방법 변경, 단계적 축소,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위탁사업이 관행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함.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7.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규 수탁 활성화

○ 그동안 민간위탁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여 민간위탁시장에 진입한 수탁법인들의 장기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신생 기관들이 진입장벽으로 인한 제한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박기목 외 2020, 103).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일부 사무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제도이지만, 현행 제도에서 개인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

－ 울산시 북구도 명시적으로 개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수탁기관을 단체와 법인에 한정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음.

○ 수탁기관의 문호 개방

－ 공정한 민간위탁 절차의 확립과 더불어 민간위탁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민간주체들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23)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별 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음.

－ 또한, 사업자등록증 요구, 사회적 가치지향 사무와 같은 경우 해당 의제와 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준영 이정용 2021),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경제 주체의 수탁 활성화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외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청소 및 시설관리,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장애인 보호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이 확대되고 있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민간위탁 참여 장려’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참여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5조의3(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 생략
 12.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우선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 이에 민간위탁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민간위탁조례에 포함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참여 장려’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참여 지원’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법인전입금 규모의 축소 혹은 폐지

-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전입금 규모의 축소 혹은 폐지 방안 필요.
- 법인전입금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식적인 항목은 아니나, 통상 수탁기관의 재정적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자치단체에 따라 위탁시설의 재정적 운영능력 평가를 위해 법인전입금의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간위탁 선정 시 동일조건일 경우 법인전입금 액수가 수탁자 선정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서 수탁희망기관들 사이에 법인전입금 약정액 경쟁이 발생하기도 함(정창수·신희진·김민수 2023).
- 이번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설문조사에서도 법인전입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7.5%를 차지.
-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등 법인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수탁법인이 불합리하게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수익사업의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국민권익위 2018).

- 특히, 자립기반이 취약한 법인의 참여를 제한함. 무엇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관이 위탁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재정적 부담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 민간이 '비용 부담의 의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의 부과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정창기·이규홍·김현수 2020).
- 이에 법인전입금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며 존치할 때도 합리적인 액수로 상한을 정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비리를 방지하고 세부적인 관리지침 수립이 필요함.

마. 동일 수탁기관의 다수 수탁 제한

- 한 수탁기관이 장기위탁하는 문제와 함께 다수의 위탁사무를 맡는 경우도 신규기관의 진입을 저해하고, 민간위탁의 관성적 운영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광주시 광산구 사례처럼 동일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조례에 동일 수탁기관의 다수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④ 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이 30%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 등

3.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1)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 등이 사전에 공개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절차가 중요함.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의 사전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의 85.2%(207곳)이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97.1%(236곳)에 달하며, 수탁자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2곳(대구, 광주)에 불과하는 등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국민권익위원회 2018).
- 이처럼 많은 위탁사업이 기존 단체나 기관 등과 관행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단체가 선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마포구의회 2022).

□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국민권익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 선정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둘째, 선정결과 공개 셋째, 해당사자 이의신청 절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와 더불어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

2) 울산시 복구 현황

-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부정위탁, 장기독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 선정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 울산시 북구에서도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울산시 북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음.

- 그러나 여전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운영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

3) 개선방안

가. 민간위탁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 민간위탁 운영·선정·심의 기구의 개선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재계약 적정성,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기준 적정성을 비롯한 성과평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와 같이 지역 구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간위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여 민간 심의 기능 및 참여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현행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심사위원 일정 배수 이상으로 예비 심사위원을 사전 선정하여 추천을 통해 심사위원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주민 참여 확대

- 지역주민의 참여는 위탁으로 인한 공공성을 유지·개선하고, 수탁기관의 독과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 효과를 지님(김덕준 임정빈 2023, 123).

- 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구민이 민간위탁 관련 기구에 참여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공공성, 효율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해당 분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의한 비영리민간단체나 전문가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회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봉구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구성 요건에서 ‘주민단체의 대표자’를 명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전문성이 확보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주민단체의 대표자
 3. 도봉구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민간위탁 조례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주민참여)

-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회계 투명성 강화

○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 민간위탁사업이 공적 자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사회적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
-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및 감독에서도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사업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사 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 첫째,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조항' 추가.
- 둘째, 모든 민간위탁 사업을 외부 회계 감사 대상 사무로 선정.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표준협약서에 포함.
- 셋째,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필요. 현재 회계법인 선정은 사업부서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선정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회계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단, 민간위탁 사무 예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기관의 재정적 여건상 외부 회계 감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

○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도입

- 통상 위탁사무별로 개별 양식에 의해 예결산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지출내역증빙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영수증 증빙자료 첨부, 회계자료 보관 및 확인 등에 행정력의 낭비가 극심해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관리 효율성 증대 가능.
- 서울시는 ‘서울시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민간위탁기관의 회계관리 체계화, 투명화하고 있음.
- 울산시 북구도 별도의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산과 결산을 관리하고, 모든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는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민간위탁시설·사무 종사자 보호

1) 민간위탁시설·사무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

□ 민간위탁시설·사무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

- 민간위탁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시설수탁자 변경 시 종사자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고용불안의 위험성이 높고, 행정사무위탁의 특성상 행정을 대신하여 직접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인해 노동강도가 세고, 감정노동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시설·사무 종사자 보호에 관한 정책 현황

- 정부는 2019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수탁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승계 등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민간위탁 시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2023)에서도 위탁평가 내용에 사업성과, 사업 효과성, 시설 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명문화

- 많은 지자체들은 민간위탁조례의 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탁 기관 의무 조항에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권익 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음.
- 나아가 민간위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지자체도 있음.
- 부산시를 비롯하여 부산시 연제구, 중구, 남구 등의 조례에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노동 인지도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울산시 복구 현황

- 울산시 복구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명시하고(제4조의 5),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하나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정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또한, 수탁기관 신청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를 제출하여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 위탁 시,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상기 법인(단체)은 00 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사무 노동자의 노동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수탁기관의 노동자에게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및 4대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의 부담금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고용의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수탁기간과 근로계약을 동일한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4. 노동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근로시간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법 인 명 : (인)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3) 개선방안

가. 조례에 민간위탁시설·사무 종사자의 고용보장 규정 마련

- 현행 민간위탁 조례상 내용에 더해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표준협약서 혹은 이행서약서에 종사자 권익 보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함.

－ 부안군에서는 민간위탁조례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고용승계)

-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나. 표준협약서 내 종사자 권익 보호 조항 포함

- 민간위탁조례의 ‘위탁계약 체결’ 조항에 고용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협약서에 권익보호 관련 내용 명시

- 민간위탁 종사자는 행정을 대신하여 주민을 상대하는 사무로 악성 민원 등 감정 노동에 노출될 위험이 큰 상태로 어느 직업군보다 권익보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위수탁협약서에 위탁사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만 명시되어 있고, 종사자의 권리, 임금수준, 복리후생, 고용승계 등 종사자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정창수·김민수·김유리 2023).

[표 70] 표준협약서 내 종사자 권익보호 조항 예시

제〇〇호(종사자 권익보호) ① 종사자의 임면과 관리는 “△△”의 책임으로 하되, 해직·퇴사·이동 등 수탁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인사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에 즉각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정규적으로 관리하되, 필요에 의해 비정규직 및 임시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업무 진행 시 “△△”는 ‘종사자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구”에 제출해야 하며, “구”는 종사자의 권익보호가 준수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표 71]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 조례 협약 체결 조항 내 신설(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협약체결 등)

-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7.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8.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확약서에 노동자 권익 보호 내용 강화

- 현재 울산은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이 수탁운영을 신청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납부 등 사업주의 부담금 의무, △ 고용 유지 및 고용 승계 노력,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등

○ 확약서에 기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탁기관의 고용 규모가 크지 않아 현행 노동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현재 확약서에 담긴 내용 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인종·종교·신체·성별·출생·노조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승진·이직·퇴직 등의 차별 조장 및 금지, 적정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휴가 시 대체 인력 배치 및 업무 조정 등 좀 더 세밀하게 민간위탁 노동자의 권익 보호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표 72]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예시

<p>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p>	
<p>○○○는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p>	
<p>1. ○○○는 수탁사무 종사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2. 종사자에 대해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p>	
<p>3. 종사자에게는 ...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해 지급하겠습니다.</p>	
<p>4. 종사자에게 신체적 접촉·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및 언어폭력·정신적 강압 등은 허용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을 예방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p>	
<p>5.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해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p>	
<p>○○○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p>	
주소 :	
수탁기관명 :	
대표자 :	(인)

VI. 정책 제언

1. 민간위탁금 중 사회복지성 지원금 항목 재편성 검토

- 2024년 기준 울산 북구의 민간위탁금 비중은 15.6%로 타 지역 기초지자체나 전국기초지자체 평균(4.9%)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이는 민간위탁금 가운데 보육료 지원금, 장애인활동 지원금, 의료관련 지원금, 사회서비스지원금 등 정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 사회복지성 지원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대전이나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 보육료 지원금이나 장애인활동 지원금을 예산항목상 민간위탁(307-05)이 아니라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이나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하고 있음.
- 만약 울산 북구의 민간위탁금 가운데, 보육료 지원금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금 등 사회복지성 지원금을 대전과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처럼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한다면, 2024년 현재 울산 북구의 민간위탁금 규모는 235억원으로 대폭 줄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로 감소하게 돼 전국 지자체 평균 (4.9%) 수준과 유사할 것임.
- 이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근거로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육료 지원금, 장애인활동 지원금, 의료관련 지원금, 사회서비스지원금 등 정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성 지원금을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타 사회복지관련 수혜금이나 보조 항목으로 변경 편성해 관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위탁관리지침 작성

□ 민간위탁관리지침의 필요성

- 울산시 북구는 현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사무처리 등을 원활하고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입안이 필요함.
- 통상 지침이란 법령의 시행과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상례적·정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할 계속성 있는 사무에 관하여 그 처리방법 및 처리상의 유의점, 처리상 필요한 기본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을 의미함.
- 민간위탁관리지침은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에 필요한 주요 규정 및 절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기준 및 양식 등을 제공하여 민간위탁사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 민간위탁관리지침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핵심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민간위탁사무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탁기관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상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또한, 민간위탁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표 73] 광역 지자체 사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1장 민간위탁의 개요	제1절 민간위탁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제3절 유사개념과의 비교 제4절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제2장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제1절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제2절 민간위탁 유형 제3절 수익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시설의 위탁유형 선택 제4절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 및 이용료 수입의 상계 처리
제3장 민간위탁 추진절차 개요	제1절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정의와 특징 제2절 신규위탁 및 재위탁, 재계약 절차 제3절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시 유의사항 제4절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 위탁으로 변경·처리하는 기준
제4장 민간위탁 추진절차 상세	제1절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제2절 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절차
제5장 민간위탁 사무관리	제1절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제2절 수탁기관의 인사·노무 관리 기준 제3절 위탁 주관부서 유의사항 및 수탁기관의 의무 제4절 지도·점검 실시 제5절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 제6절 회계감사 실시 제7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실시 제8절 민간위탁 현황, 회계관리시스템 등록·사용 제9절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사무의 종료
제6장 주요 질의 및 답변	
제7장 감사 등 지적사례	
붙임자료	1.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2.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사무형) 3. 수탁기관 공모, 선정 운영기준 및 제안서 평가기준 ·적격자 평가기준 중 감점 항목 해당 여부 확인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중·장기 성과관리계획·관리카드 작성서식 5. 민간위탁 동의안 서식 ·시의회 동의 시 성과보고서 제출 서식(예시) 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 조치(예시) 7.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8. 민간위탁기관 채용 업무 매뉴얼(안)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서약서 ·채용심사위원 제척, 회피 신청서(심사위원용) ·채용심사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지원자용) 9. 공정채용 체크리스트(안) 10.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가이드라인(안) 11. 공익감사단 운영 안내 12. 2023년 유형별 종합성과평가 지표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4.4.5. 시행) 1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36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민간위탁관리지침 작성 의무화

-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위탁관리지침' 제공을 명문화한 경우는 많지 않음(정창수·김민수·김유리 2023).
- 이에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민간위탁 관리지침 작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관리지침 및 사무편람)</p> <p>① <u>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각 민간위탁 사무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u></p> <p>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관리지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위탁의 정의와 목적, 위탁 절차, 성과 평가 및 관리 성과 지표를 포함하여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양식을 포함하고 있음.
- 울산시 북구에서도 민간위탁 관련 법령과 조례, 현행 민간위탁사무 운영

절차를 종합하고,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지침을 참고하여 민간위탁관리지침을 작성, 민간위탁관리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표 74] 기초 지자체 사례: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I. 수립근거	
II. 민간위탁의 개념	
III.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IV.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②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③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④ 구의회 동의·보고 ⑤ 수탁기관 선정 ⑥ 계약심사 및 협약(서) 적정 검토 ⑦ 위·수탁 협약 체결 ⑧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⑨ 사후관리 ⑩ 성과평가 실시
V.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②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③ 수탁기관 선정 ④ 구의회 동의·보고 ⑤ 계약심사 및 협약(서) 적정 검토 ⑥ 위·수탁 협약 체결 ⑦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⑧ 사후관리 ⑨ 성과평가 실시
VI. 붙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서 작성서식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시 작성서식 ·이의신청서 및 결과 통보서 서식 ·위·수탁 표준 협약서 ·지도·점검 항목(안) ·성과평가결과서(안) ·의회 동의 시 성과평가결과서 작성서식 ·서울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점검표 ·가산점 평가방법

3. 조례 개정 필요 사항 정리

1) 구 의회 역할 강화

□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

현행	개정안
<p>제4조의3(승인및동의) ①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p>	<p>제4조의3(승인및동의) (1안: ②항 수정) <u>②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2안: ①항 수정) ①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의3(승인및동의) (추가 조항 신설) <u>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u></p>

□ 성과평가 결과 구의회 보고

현행	개정안
<p>제16조(성과평가)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u>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u> 공개하여야 한다.</p>

2) 민간위탁관리지침 의무 작성

현행	개정안
<p>제13조(사무편람)</p> <p>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3조(관리지침 및 사무편람)</p> <p>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각 민간위탁 사무 담당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이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3) 장기위탁 관행 해소

□ 장기 위탁 제한

현행	개정안
<p>제8조(협약체결 등)</p> <p>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8조(협약체결 등)</p> <p>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 동일기관의 다수 수탁 방지

현행	개정안
<p>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p> <p>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p>	<p>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추가 조항 신설)</p> <p>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이 30%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 등

□ 일몰제 도입

현행	개정안
(관련조항 없음)	<p>(일몰제 도입 조항 신설)</p> <p>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u>민간위탁 협약을 3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3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p>

□ 신규 진입 활성화

현행	개정안
<p>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p> <p>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p>	<p><u>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조항 신설</u> <u>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u></p>

4)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현행	개정안
<p>(관련조항 없음)</p>	<p>(1안: 인센티브 조항 신설)</p> <p>①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비용보전 및 연장계약(이하 “인센티브”라 한다.) 또는 위탁계약 해지·감액(이하 “패널티”라 한다.) 등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다.</p> <p>1. 위탁비용보전 (금전적 보상)</p> <p>2. 재계약·재위탁 선정 시 가점 부여</p> <p>3. 우수기관 표창 및 홍보</p> <p>4. 국내·외 연수, 컨설팅 지원 등</p> <p>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패널티로 부여할 수 있다.</p> <p>1. 위탁비용감액 및 환수</p> <p>2. 차기 입찰 참여기회 제한</p> <p>④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기준 및 방안은 협약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다.</p> <p>2안: 제16조(성과평가) 추가 조항 신설</p>

5) 주민 참여 활성화

현행	개정안
(관련조항 없음)	<p>(주민 참여 활성화 조항 신설)</p> <p>①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p>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6) 회계 감사

현행	개정안
<p>제9조(수탁기관의 의무)</p> <p>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추가 조항 신설</p> <p>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회계감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7) 민간위탁시설·사무 노동자의 권익 보호

현행	개정안
<p>제8조(협약체결 등)</p> <p>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7.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8조(협약체결 등)</p> <p>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7.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8.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문헌

- 감사원. (2020).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I」.
- 강서구. (20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강인성. (201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강병준·윤건·윤민석. (2015).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6(2).
- 국민권익위원회. (20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
- 김덕준·임정빈. (2023).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7(2).
- 김영종. (2017).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보건사회연구 37(4).
- 김정해 외. (2015).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정해 외. (2020). 「민간위탁 문제 사례 분석 정부디자인」. ISSUE No.4.
- 권경선. (2021).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법제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5(3).
- 박기목 외. (2020).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7(3).
- 박성애·이령. (2022). 「지방정부 민간위탁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2022년도 서울행정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울시. (2017).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 서울시. (202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서울시 마포구의회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2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이정석·박충훈. (2020). 「부산시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개발 연구 BDI연구보고서」.

- 이준영·이정용. (2019). 「서울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구축 위한 실행방안」. 서울연구원.
- 정병순·황원실·양세중. (2018).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 정창기·이규홍·김현수. (2020). 「구로구 민간위탁 운영 진단과 발전방안」. 구로구·희망제작소.
- 정창수 외. (2021). 「사상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나라살림연구소.
- 정창수·주진우·이영숙. (20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나라살림연구소.
- 주재복·정창수·박현숙. (2020).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철호. (2013). 「국가사무 위임·위탁법제에 관한 고찰 법제(2013.12)」.
- 행정안전부. (2020).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 행정자치부. (200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 황혜신 외. (2018). 「민간위탁 관련 법령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